

〈 학 · 술 · 대 · 토 · 론 · 회 〉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비판과 대안**

- ◇ 때 : 1999년 10월 25일 오후 1시~5시
- ◇ 곳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 주최 :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 모임

〈 학 · 술 · 대 · 토 · 론 · 회 〉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비판과 대안**

- ◇ 때 : 1999년 10월 25일 오후 1시~5시
- ◇ 곳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 주최 :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 모임

〈 학 · 술 · 대 · 토 · 론 · 회 〉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비판과 대안

- <기조발제>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의 부당성 / 조동걸 (전 국민대, 한국사)
<1주제> “용”과 “위기” 사이 : 박정희 시대에 대한 서설 / 도진순 (창원대, 한국사)
<2주제>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 방향 / 박찬승 (목포대, 한국사)

사회 : 주진오 (상명대, 한국사)
토론 :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
신병철 (석관중, 전국역사교사모임)
이상민 (정부기록보존소, 서양사)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사회학)
임지현 (한양대, 서양사)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 때 : 1999년 10월 25일 오후 1시-5시
- 곳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주최 :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 모임

'박정희 기념관' 건립, 철저히하라

조 동 결

국민대 명예교수, 한국사

지난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 40여 명과의 만찬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듣는 순간 필자는 거기에 잠재된 정치적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았으나 무엇이 되었든지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박정희기념관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이 돼도 대통령기념관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기념관을 거론할 시기는 통일 후가 아니면 당사자 사망 후 50년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화해와 기념관은 별개의 문제다

이에 관한 보도를 보면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같다. "김중권 비서실장이 '티케이 대부'인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의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한용)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각본대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건의 형식으로 말문을 연 데 이어 김대통령이 응답의 격려사를 했다. 김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자리를 함께 했다. 인간으로서 과거의 정적에 대한 증오를 너머 박대통령을 추모하고 그 일을 위한 사업을 협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맹세코 박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판했으나 사람으로서 미워하지는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박대통령과 정다웠던 기억을 더듬은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5조에 기념사업을 정부가 돕도록 되어있다. 지난 대선 때 구미 생가를 방문, 지원을 약속했다. 어떤 사람은 선거에 표가 급해 그런다고 했다. 솔직히 그런 점도 있었다.…… 과거 정적관계로 박해도 받았으나 다 청산하고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그분을 재평가하여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뜻깊고 여러분도 감회가 클 것이다. 이것이 국민 사이에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의 좋은 점을 따르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념사업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그 기사를 읽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되었어도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뒤이어 신현확 전 총리를 비롯한 지역인사들의 답사가 있었고, 김수학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의 현황 설명에 이어 이의근 지사가 기념관에 대하여 “설계도 아직 안된 상태다. 약 7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고,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진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고 기부금모금 허용 등 모든 행정조치를 대통령 뜻에 따라 하겠다”라는 말에 이어 김대통령이 “꼭 성공시켜야 한다. 이지사, 김수학 위원장, 김행자부장관, 김중권 비서실장이 협의하고 앞장은 역시 신현확 선생이 맡아야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했다.

앞으로 신현확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여 김중권 실장, 김기재 장관, 이의근 지사에 의해서 민관 합동이라지만, 실재는 관 주도로 추진될 모양인데, 주목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성이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김대중이 경선한 이후 탄압받아온 과거를 관용으로 청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의 탄압이 김대중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김대통령이 그런다고 역사에 쌓여있는 양금까지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김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다.

다음에 영호남의 지역감정도 1971년 박정희-김대중의 대선 때부터 생겨난 것인데 그것도 기념관 건립으로 청산해보자는 것이다. 기념관을 세우면 박정희 추종자들이 김대통령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연장하여 호남에 대한 종전 감정을 버리게 된다는 말인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 문제에 관한 한 호남은 호남이고 김대중은 김대중인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영남사람들 즉, 영남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영남과 박정희를 동일시하는 것을 영남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터이니 역효과를 낼 것이다.

그에 앞서 근본적 문제는 기념관 건립의 정당성이 없다는 데 있다. 김대통령의 머리에 각인된 박대통령은 존경할 인물인지 모르나 박대통령의 생애나 업적 가운데는 기념해서 안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것들은 누가 용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관용을 베푸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용이 아무리 높은 덕목이라고 해도 기념관 건립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다.

기념관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관용은 기념관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건도 아니며, 기념관이 그런 것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기념관이라면 몰라도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투자한 공공기념관이라면 국민이 마음에 새길(기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꾸며져야 하고 거짓과 과장없이 오로지 진실을 담아야 하는데 진실을 담은 박정희기념관이라면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위인, 열사들의 공공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중의 이야기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의 행적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사회교육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이라

고 해서 대통령 재임기간의 행적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라면, 경북 선산에서 태어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대구사범학교 수학, 문경소학교 교원, 만주와 일본 육군사관학교 수학, 일본군 장교로 중국전선에 출동한 것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독립군이 독립전쟁을 펴던 중국전선에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으로 파견되어있었다는 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숨길 수 없다면 그 대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어떤 책에 박정희가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에 투신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 있고 언젠가 그렇게 방송까지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 광복군의 북경 잠편지대(지대장 이재현)에 몸을 기탁하여 귀국한 것을 과장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했는데 그때는 남로당과 관계를 맺었다가 재판을 받고 또 변심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숨길 수는 없는 진실이다. 이것은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변질을 거듭한 그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업적에도 결코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통령의 자리가 쿠데타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측근자의 총에 맞아 끝을 맺었다. 그러니 대통령의 처음과 마지막, 즉 서론과 결론을 기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일회담과 월남참전 등 대외정책의 실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만연, 유신독재로 해방 이래 성장해오던 민주주의의 파괴, 반공의 맹목적 강화로 대북정책의 실패 등 5·16정권이 아니라면 찾아오지 않았을 문제들을 만들어 내어 역사를 크게 후퇴시켰다.

그래도 산업화의 업적은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누구처럼 산업화를 근대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근대화란 민주화와 산업화를 묶어 말하는 낱말이다. 그러므로 산업화라고 한정해서 일컬어야 하는데 산업화에 한정한다고 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발독재로 정경유착을 낳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구조화되었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에서 보듯이 부실공사와 불성실한 생활풍토가 만성화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부작용도 많고 그나마 성공할지도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후세에 남겨놓았다.

또 새마을운동을 큰 업적으로 꼽는다. 농촌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컸다. 그런데 새바람을 발전시키는 후속정책이 따르지 못하여 퇴색되고 말았다. 새마을운동을 유신독재의 전국 조직으로 악용한 탓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 무렵에 추진된 중공업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농민의 이농현상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문화농촌 건설이라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노인들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농촌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니까 기념할 정도의 내용이 없다는 말이다. 혹은 사설 기념관처럼 거짓으로 번듯하게 운문 윤색해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거짓과 운문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공공기념관은 공공의 여론에 따라 언젠가는 진실대로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함석헌의 외침을, 장준하의 죽음을, 정보부 지하실의 참극을 전시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만다. 그때

는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기념관의 건립은 화합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을 만드는 곳이 된다. 멀리를 보라. 그때는 유족들도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박정희를 위한다면 사설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민주주의 기념관부터 세워라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종 기념관은 관람한 것 같지가 않다. 아니면 측근인사 가운데 군국주의 술사 방식의 인물이 있어서 잘못 진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현재 위치는 군사정권으로 차단되고 반동화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경제파탄을 수습하느라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유신세력과의 공동정권도 불가피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때론 전진을 위하여 일보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본질적 후퇴로는 보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니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군사정권과 노골적인 야합이므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념관이란 세웠다가 싫으면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정권이 세우면 김대중정권을 대변해주는 기념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정권이 아무리 화해한다고 해도 박정희정권을 대변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김대중정권이 탄생하기까지, 즉 오늘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까지 박정희정권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양 정권이 화해는 할 수 있어도 기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기념해야 할 것은 피를 흘리며 달성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기념관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관용·화해·화합을 위한 기념물을 만드는 것은 별 문제이다.

민주주의기념관을 건립하여 4·19혁명의 기초 위에 1960년대의 6·3항쟁과 3선개헌반대투쟁, 1970년대의 유신반대투쟁과 부마민중항쟁, 1980년대의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정의로운 기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몸바친 장준하 같은 인물 기념관도 생각해봄직하다.

그런데 거꾸로 일본에 충성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박정희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는가. 양심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과거의 정적과 화해하는 것은 김대통령이 7월 4일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상 수상 연설에서 지적한 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빛나게 한다. 그러나 화해가 곧 추종, 존경을 뜻하는 '기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공 화국 만델라의 화해정책도 추종 같은 무조건의 화해가 아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하여 분간있는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서 분간이란 진실 여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만델라는 당장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속에서 민주주의 열사들이 외치던 정의를 현창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서는 「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시켜놓고 있다. 거기에서 국민회의는 민주화운동의 시기의 기점을 1969년 8월 7일 박정희정권이 삼선개헌을 발의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을 예우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김대중정권이 돌아서서는 그를 희생시킨 박정권을 추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이율배반정책을 역사는 무엇이라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는가. 잔피와 잔재주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유신체제 속에서 공포에 떨고 가슴 조이며 살던 삶을 가슴 펴게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공포정치를 자행하던 정권을 기념관으로 찬양한단 말인가. 그것은 민주화의 함성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민주화의 함성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철학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짓누르던 유신체제가 생산한 것이 12·12정권이라는 것까지를 생각해보라. 5·16이 쓰러져갈 때 유신 특효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없이 그도 쓰러지고 말았다. 그 쓰러진 고목에서 독버섯으로 움돋은 것이 12·12정권이 아니던가. 그 독버섯을 없애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 그 희생 위에 김대중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야당 당수로서 민주화투쟁 속에서 나름의 신명도 있었고 강연장에서 멋도 부릴 수 있었고, 국민으로부터 박수도 받는 가운데 보람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더불어 명성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박정희가 때론 고마운 정치동반자로 추억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전쟁을 마친 장군처럼 승장과 패장이 악수하는 기분으로, 또 추억을 되씹으며 용서해주는 나름의 쾌감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름 없이 죽어간 민주주의 열사와 정보부 지하실에서 야만적 몽둥이에 멎든 수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보았다면 민주주의의 정체를 분명히 한 연후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화합하는 것이어늘, 민주주의기념관을 세우는 것 같은 민주주의의 정체도 정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상대의 정비작업부터 착수하는 것인가. 그것을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꿈꿉이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기념관 가운데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이나 중국의 남경대학살기념관 같이 독일군이나 일본군의 만행을 사실대로 전시하여 역사적 반성의 교육장으로 삼는 곳도 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이 일본침략과 학정을 폭로하고 있는 전시관으로 역시 반인류성을 고발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박정희기념관이 박정희를 고발하는 곳일 수는 없을 것 아닌가.

대통령기념관은 안된다.

5월 13일 모임의 뒷공론에는 이승만기념관의 이야기도 있고, 김대중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말도 있다.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을 설투로 해서 기념관 경쟁이 일어날 웃지 못할 사태가 염려되는 것이다. 이미 국제적 포상경쟁을 일으켜 망신한 소리가 있는데 기념관 경쟁을 일으켜 또다시 망신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선인

들은 서산대사의 “踏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해석)”이라는 글을 외면서 선례를 만드는 일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이다. 선례가 무섭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해도 역사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찬양하는 사업은 하나같이 잡음과 추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생사당(生祠堂)과 선정비(善政碑) 또는 공덕비(功德碑), 그리고 근래에는 동상(銅像) 건립문제였다. 1888년에 춘천이 유수부가 되고 초대 유수에 민두호(閔斗鎬)가 부임했는데 그때 생사당을 건립케 했다. 민비의 척족인 민두호의 세도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춘천부민들이 봉기하여 민두호의 생사당부터 때려부셨다. 을미의병 봉기 가운데 특수한 경우였다. 생사당은 다른 곳에도 있었으나 누구의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선정비는 수탈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어 어느 후손도 조상의 선정비를 자랑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버림받고 있다. 선정비 압력이 얼마나 혹심했든가는 청송 부사가 떠나면 우선 나무로 만든 목비부터 세워놓고 다음을 대비했다고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비가 한 개도 없는 안동은 수많은 안동부사로부터 보복을 당한 이야기가 많은 데서 알 수 있다. 1920년대 전반기에 암태도와 하의도에 소작쟁의가 한창일 때 소작농민이 지주의 공덕비를 뽑아들고 항쟁했던 이야기도 유명하다.

1956년에 심산 김창숙은 남산에 세워져 있던 이승만의 동상을 보고 “插天銅像奪人魂 獨裁功德今如許 請看 滄桑一瞬變”(해석)이라고 한순간에 동상이 없어질 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기념관을 함부로 세우다가 보면 4·19 당시 이승만 동상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선례를 만들다가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라. 이유야 달랐지만 하나같이 비참하게 물러났다. 물러나서는 불쌍사납게 서로 욕하며 싸우고 있다. 창피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기념관 경쟁까지 일어날 것을 상상해보라. 무슨 꼴 불견이 될 것인가.

30여 년간의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개혁을 추진했으나 3당합당의 구조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경제과탄에 이르고 말았다. 그에 이어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여 경제과탄을 수습하고, 바야흐로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유신세력과 공동정권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데,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군사정권으로 정체된 민주화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경제적 민주화 — 6월 26일 한국방송 심야토론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진한다는 ‘생산적 복지체제’라고 하는 그 정도라도 — 를 달성한다면, 그리고 대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기초를 쌓는다면 역사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필자는 작금의 민주주의 개혁을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운동 이래 계속 유산되어온 개혁이 200년만에 달성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200년만의 개혁을 성공한다면 김대중은 대통령 이상의 역사적 인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구렁다고 해도 김대중 생시에는 기념관을 거론해서 안 된다. 사후에 거론한다고 해도 공공기

념관은 50년은 경과한 후에 거론해야 한다. 50년이라고 하는 연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타계한 지 지금 20년이 경과했다. 20년이 경과한 오늘날인데 박정권 당시의 이해당사자들이 정계에 수없이 남아있다. 즉 기념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자신의 명예나 정치운명과 깊은 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정계에 남아있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한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당시의 각료와 정보부장과 비서실장 가운데 아직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설 기념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념관 논의를 공정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 30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도 사후 50년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의 입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는 한국현대사의 풍토를 고려한다면 50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현대사의 인물 가운데 사후 5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이 함께 기념할 인물이 생겨났다. 그것은 백범 김구이다. 지난 6월 29일의 서거 50주기를 맞았을 때 북한에서 공동 추도식을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추모할 인물이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그것이지만, 우연일지는 몰라도 사후 50년에 이르러 남북의 평가가 근접하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철회하라

5월 13일의 모임 보도가 있고 난 뒤에 각계의 반응이 뒤를 이어 보도되었다. 여야 정당이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언론지들에도 찬성의 소리가 높았다. 찬성이유는 한결같이 ‘과거와의 화해’ 또는 ‘동서화합’에 있었다. 화합으로 보면 박수를 아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기념관은 화합이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 기준이라고 보면 초점이 맞지 않는 찬성론이다. 그리고 진실을 기준한다면 새로운 분란을 만드는 장소가 될 염려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화합이나 분열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찬성론 가운데 대통령 기록관이나 유물관과 혼동한 경우가 있는데 기록관이나 유물관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추모하는 기념관과는 다른 것이므로 논의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좀 색다른 화합론도 있었다. 5월 21일 국민정치연구회 월례포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원 팔격인 한화갑 의원이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의 전직 대통령을 ‘잠재적 우군’으로 본 대화합론이 제기되었다. 화합은 백번 말해도 좋은 것이지만 잠재적 우군을 얻기 위해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념관 이론의 순수성을 이탈한 주장이다. 한의원이 5월 언젠가 광주에 갔다가 분뇨(똥오줌) 세례를 받았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학계를 대표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상진 원장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면서 찬동했는데, 그것은 정권의 철학적 기반을 포기한다는 말로 들렸다. 한원장 자신이 그 동안 민주주의론에서 박정희 군사

정권을 비판했던 것은 객관적이 아니었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에 비하여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학계는 가치관을 뒤집는 처사라는 소리와 함께 박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김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이라는 규탄론이 있었는가 하면, “단언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시절의 최대피해자가 아니며,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민족운동의 성과를 독점해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김동춘)라고 대통령의 자리를 과용하지 말라는 충정 어린 충고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집단의사로 표현된 것만 보기로 한다. 우선 현지 대구에서는 참여연대·전교조 대구지부·희망의 시민포럼 등의 시민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19일), 광주 5·18기념행사장에서는 “김대중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권 퇴진”의 유인물이 뿌려졌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 표현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넘친 나머지의 표현이지만, 김대통령에 대하여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가 높아간다고 하니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월 20일에는 서울에서 4·19혁명부상자회(회장 박종구), 4·19희생자유족회(회장 윤재락) 등 4·19혁명 관련 4개 단체가 “박 전대통령 기념사업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장기집권과 민권 탄압을 미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등 3개 역사연구단체들도 “민주주의·인권·분배정의 등의 가치를 부정한 박정희식 근대화를 기념하는 것은 현정권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개혁에 배치된다”라는 반대성명을 냈다.

이런 정도라면 김대통령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기념관 건립의 이론도 서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다. 지금의 세도를 믿고 강행한다면 김대중의 그 동안의 민주화투쟁도 권력쟁탈을 위한 위장이었다는 극단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김영삼은 김대중을 독재자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반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독재자라는 점에서는 김영삼도 한가지이다. 대통령 재임시에 김영삼이 오만에 빠져 실정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고 독재를 구사했다. 그리하여 정국의 파탄을 불러오고 말았다. 박정희를 비롯하여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유신을 만들어내고 또는 유신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유신에 감염되어 모두 유신적 독재자가 되고 말았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를 치료하다가 자신이 정신병에 감염되는 경우와 같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정당운영의 독재이다. 군사정권이 등장하기 전에는 적어도 정당 내 민주주의는 발달하고 있었다. 1970년 9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탄생시킨 것도 정당민주주의가 존속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유신체제하에서 또 박정희와 3김 시대에 이르면서 정당민주주의가 사라졌다. 공천 독재가 자행되었고, 공천 독재를 둘러싼 정치자금 문제가 독재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점에서는 3김이 누가 더하고 덜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먼저 유신독재의 늪을 걷어치우느냐가 남아있는 것이다. 작금의 내각제 문제나 양당합당 문제, 신당창당 문제가 부침하고 있는 것을 봐도 민주적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박정희기념관 문제까지 독단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념관 건립의

명분으로 화해를 내세우는데 박정희와 화해를 하고 말고는 김대중 개인의 문제이다. 두 사람의 화해를 놓고 동서화합이라고 말하는 것도 언제까지나 박정희-김대중이 영호남의 대부일 수 없다고 보면 무의미한 소리이다. 두 사람 때문에 동서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아는가. 두 사람의 문제가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루이 14세 방식의 착각이다. 그러한 착각을 벗지 못하면 독재자라는 누명도 벗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를 쉽게 해라

필자는 위의 요지를 간추려 「대통령기념관은 안 된다」라는 글을 이 문제의 진원지인 대구에 던져 보았다. 『매일신문』 1999년 7월 19일자에 실렸다. ‘칼럼’의 글이기는 했지만, 우선 신문에 실어준다는 것은 그 지방 독자들의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보았다. 다시 그 지방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무리 경상도에서 박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시골촌로까지도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이제는 그의 비판논리도 가지고 있는데 기념관을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 서서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얼떨떨해서 반신반의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필자의 글을 읽고 반겼다고 했다. 그러나 반론도 강하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투고했다. 반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착각한 민중이 정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 정의를 잡아주고 일깨워주는 한마디가 된다. 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심정으로 투고했다. 이 글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담고 썼다.

글을 맺고 있던 7월 20일에 공동정부의 양당 합당설이 톱 뉴스를 탔다. 17일 양당 보스인 양 김씨의 워커힐 회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창하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동의한 것이라고 소문났다. 그래서 양당합당이 급조 계획일 수 없을 것이므로 5월 13일에 표면화된 박정희기념관의 설립추진이 바로 양당합당의 사전포석이었다고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21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양당합당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연내 개헌을 통한 내각제는 연기한다는 것을 김대중·김종필의 합의사항으로 발표했다. 무엇이 꼬이고 있는 모양이나 양당합당 문제는 이면에서 크게 진전되어온 것 같다. 그리하여 합당론이 정가를 휩쓴 것이 하루 동안에 불과하지만 양당의 이질성을 좁히는 효과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의 군사정권옹호론과 국민회의의 민주화옹호론 어느 쪽으로 좁혀지고 혹은 동질화되어갈 것인가는 주목할 일이지만, 그에 따라 박정희기념관 논의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기상천외한 뉴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질식할까 두렵기만 하다.

아니나 다를까 22일에는 김대중이 제2창당을 선언하고 나섰고 김영삼은 민주산악회를 전국적으로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바라는 바는 3김시대를 재현하려는 팔부치 생각들일랑 말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김대통령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복잡하게 돌리다가 오해를 사지 말고 알기 쉬운 정치를 하라고 말해두고 싶다.

"용"과 "위기" 사이: 박정희시대에 대한 서설

도진순
창원대, 한국현대사

1. 논의의 초점

2.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의 "선택적 친화력"?

- 1) 발전국가론의 친구와 교리
- 2) 발전국가론의 공헌과 문제점

3. "네 마리용"과 "IMF 위기"

- 1) 동아시아 3국의 "IMF 위기"
- 2) "기적"과 "붕괴" 사이

4. 맺음말: 냉전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오늘날 지구상에 우리처럼 심각한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만큼 호전적이며 모험적인 침략세력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들의 한발자욱의 움직임이 곧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흔드는 착잡한 국제환경 아래 놓여 있는 나라가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날 가장 도시화되고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문명화된 선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행복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게 된다.

(박정희, 1978)

1. 논의의 초점

박정희에 대해서는 영웅과 위인이라는 칭송과 독재자·파시스트라는 비판이 꽤 오랜 시간 대립하였으며,¹⁾ 이것은 우리시대 또 하나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평가의 궤적을 보면, 암살 직후에는 민주화 분위기와 결합하여 비판적 여론이 압도하였다. 그러나 유신 잔재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유신 본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으로 복귀하여 여당의 한 부분이 되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이른바 '무주공산'이라는 경북지역의 득표를 위해 대통령 후보들이 박정희를 이용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개혁 실패와 경제적 파국으로 박정희 향수는 급부상하였다. 아마도 그 최정점은 1997년 대통령선거였으나, IMF 위기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박정희 옹호론'의 부상에는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나아가 출세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²⁾ 그렇다면 '박정희 향수'는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자연 소멸할 것인가. 그러나, 박정희 옹호론에는 단지 '유령'이나 '신드롬'으로만 볼 수 없는 만만찮은 상황들이 개입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박정희식 경제발전예 대한 옹호론적 연구가 풍미하였으며, 대중적 지지기반도 역시 남아 있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박정희 문제가 지니는 장기성과 대중적 지지의 근원은 어떠한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5·16쿠데타와 집권과정, 제3공화국, 자주국방론과 핵개발, 유신 등 시기와 주제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³⁾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 즉 근대화정책이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秘史, 즉 滿軍 경력, 左翼 경험과 여순사태 당시의 배반, 한국전쟁 도중의 쿠데타 시도, 권력 장악 이후의 독재와 여성 편력 등등이 공개되면서⁴⁾ 박정희의 부정적 인생 편력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경제우선론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실정이다. 아무튼 근대화와 경제발전은 박정희 평가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이 되어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현실 구조와 관련하여 경제문제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전후 맥락이라는 시간의 연장과 아시아 나라와의 비교라는 공간의 확대를 통해

1. 한국정치연구회 편, 1998,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2. 진중권, 1997, 『박정희와 악마주의』, 『문학동네』 겨울호; 강준만, 1997, 『왜 박정희 유령이 떠도는가』, 『인물과 사상』; 2; 박홍규, 1997, 『박정희 향수 조장하는 '먹물 패거리들』, 『말』 8월호.
 3. 대체로 유신과 독재 등 말기의 독재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은 새마을운동, 5·16쿠데타와 집권과정, 자주국방론과 핵개발, 제3공화국 등의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추적과 연구들이 참고된다. 정창현, 1993, 『5·16쿠데타는 미국이 주도했다』, 『말』 4월호; 오연호, 1993, 『미8군 사령관의 반이승만 쿠데타 작전계획서』, 『말』 6월호; 오연호, 1993, 『박정희의 미대사관저 침실쿠데타 5시간』, 『말』 7월호; 박세길, 1993, 『인간 박정희, 변절과 권력 욕의 화신』, 『역사비평』 여름호; 문명자, 1997, 『"이후락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는 박정희 것이었다":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프레이즈위원회 비밀증언』, 『말』 8월호; 문명자, 『박정희 비자금 메먹은 미의회 로비스트 박동선, 김한조』, 『말』 9월호; 문명자, 1997, 『박정희, 김종필의 좌익 전력』, 『말』 10월호.

서, 한반도의 현실구조는 더욱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박정희 옹호론'의 대중적 근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촉급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각주나 참고문헌의 부실, 사실관계와 엄밀성 부족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2.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의 "선택적 친화력"?

1) 발전국가론의 친구와 교리

그간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에 대한 연구와 비판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는 다양한 평가를 두루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주의적 관점의 발전국가론'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이론이 문제가 많고 비판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 반대, 즉 비교적 최근의 이론으로 나름의 논리로 현실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⁵⁾ 국제적 족보를 가지는 영향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국가론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전반 주로 풍미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대표적인 친구들로는 "식민지근대화론" "유교자본주의론" 등이 있다. 두 이론은 경제발전의 근거가 전통적 유교인가, 근대적 식민지인가에서는 다르지만,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나타난 이론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그런데 유교자본주의론에서 중요한 주춧돌은 일본이지만, 막상 일본에서는 유교가 한번도 科擧 등을 통해서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일본 자체의 역사에서 보면 비유교적인 것도,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유교적인 것으로 독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자본주의론은 아시아의 승리를 찬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서구적 편견이 묻어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요소가 적지 않다.

식민지에서 근대화가 추[촉]진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개혁 이후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촉진되었으며, 만주사변 이후 1930년대 초반에도 상당한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 또한 일제시대의 경험이 해방 이후 경제발전에 기반이 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변수의 선차성(priority)이다. 예컨대 1920년대 인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두고 코민테른 4회 대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는 식민지 인도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차적 동력은 식민 경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식민모국이라는 것, 따라서 "자본주의적 발전"보다 "제국주의적 억압"에 주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1930년대 초의 '경제적 약진'은 내부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1940년대 '송진을 먹어야 하는 자연경제'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기순환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도 근대화되었"지만, "근대화되어도 식민지"라는 것이 진실에 가까우며, 더욱 중요하다.

5.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 이론의 맹점은 바로 '현실정합적'이라는데 있다. 즉 이 이론의 취지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데 취중되어, 사후 합리화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주로 세계자본주의 틀내에 국한되어 있어, 한편 비현실적인 측면이 없지만, 다른 한편 '현실유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박정희정권의 근대화를 분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근대화에서 선차적 동력은 무엇인가. 외부인가, 내부인가. "독재였지만 근대화시켰다"인가 "근대화시켰지만 독재였다"인가. 그의 의사 민족주의적 담론은 주체성인가, 봉건성인가. 경제발전의 동력이었는가, 독재적 동원의 논리였는가 등등.

아마도 박정희정권의 근대화에 대해 현실적 근접성을 지니고 분석한 것으로는,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어 풍미한 제도론적 관점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론'이 있다. 이 이론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 ① 후발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병행 발전' 또는 '선민주화 후산업화'의 길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 ② '민주화'와 '산업화'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생존의 문제인 '산업화'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온당하다. 따라서 산업화와 권위주의정권은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 ③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주의정권이 모두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며, '발전지향형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 ④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국가 중에서도 전통적 지배계급이 아니라, 이들이 약화된 토대위에 성립된 '국가엘리트에 의한 발전국가'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⑤ 박정희정권은 대표적인 '국가엘리트에 의한 발전지향적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 그 모델의 유효성은 지났다)

2) 발전국가론의 공헌과 문제점

이상의 이론을 종합하면 "적어도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발전국가적 권위주의 체제와 산업화는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ies)을 지닌다"는 것이다. 결론만 보면 여타의 박정희정권 불가피론 또는 옹호론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몇가지 숙고해볼 가치가 있다.

이 이론은 국가가 세계체제의 해체모니적 구조, 국내의 사회계급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이론적 지침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의 형태를 전통적 지배계급의 청산 여부에 따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성(권위주의)과 약성(민주주의)에 따른 국가의 강도, 정책지배능력인 국가의 능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계급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에 주목하여 박정희정권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이론의 공헌이다.

사실 '내부 계급으로부터 국가의 자율성'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식민지 시기의 동반 계급은 구래의 '양반'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지주'였으며, 총독부 권력은 지주로부터도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

6. 김일영, 1995, 「박정희 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 『계간 사상』 겨울호. 이 논문은 일목요연하여 발전국가론의 논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는 현저하여 '과도성장국가'로 운위되기도 한다. 여당인 자유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의 계급기반이 지주층에 더 의존적이라든지, 경제(시장)에 대한 정치의 우위 등등의 특징은 국가 권력이 비교적 사회 계급관계에 조용하는 선진국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사회과학적 비판 담론에서 취약하였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 특히 정치경제학을 원용한 강한 비판일수록 한국적 현실에서 더 많이 괴리되었던 원인은, 주로 일반 국가의 계급론적 관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전국가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있다. 제도주의에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세계·지역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여 후발국가의 산업화가 지니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것의 관계가 과연 자율적이었는지 핵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예정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식민지의 국가권력은 사회와 계급으로부터 매우 자율적이었지만, 식민모국에는 대단히 의존적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식민모국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자율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그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균림성' 또는 '억압성'이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경우 그러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발전론에서 세계체제와의 관련성에서, 자율과 타율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제삼세계 '국가 일반'과 냉전적 한반도의 '분단 국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⁷⁾ 이것 역시 진지하게 논구되고 있지 않다.

발전국가론의 더 큰 문제점은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발전의 '선택적 친화력'이란 교리를 끌어내는 전제에 있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는 병행 발전할 수 없으며, 산업화가 우선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는 과연 옳은가. 발전국가론에서는 선진국인 영국마저 엄격하게 분석하면 "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분석은 '생산력의 발전이 역사의 동력이 되었다'는 맑스주의의 근본교리와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의 특정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다.

1945년 제2차대전의 종결이후 이른바 "후발국가"의 역사를 보면, 민주화가 선차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식민지에서 해방된 경우 대중의 열화와 같은 선차적 과정은 매관세력의 거세를 통한 민주화가 선차적이고, 그 다음이 산업화, 다시 이것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민주화가 우선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즉 ① 민주화→② 산업화→①' 민주화→②' 산업화 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② 산업화→①' 민주화」의 과정만 잘라내어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초기산업화'라는 표현으로 조건의 유효기간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한과 한반도 주변마저 적용할 수 없는 한정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1950년대 이승만체제와 1960년대 박정희체제는 같은 "국가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인데도, 후자만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발전지향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박정희와 이승만의 차이인가,

7. 도집순, 1999, 「분단에 대한 연역과 통일의 전제」, 「당대비평」, 6(봄)호.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차이인가. 어느 것이든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이 불분명한 것이다.

사회주의권으로 확대하면 더욱 곤란해진다. 중국의 경우, 1950년 이후는 전통적 지배계급을 청산한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였지만 경제적으로 파산하였고, 1980년대 이후 공산당 유일독재가 계속되는 권위주의 정권은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경우 50-60년대는 남한보다 잘 살 정도로 발전하였는데,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는 그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유일한 탈출구는 자본주의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할 수 없는 '선택적 친화력'은 이미 정치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상의 의문에서 "선택적 친화력"이란, 보편적 원칙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발전을 분석한 것이라기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원칙을 확장한 혐의가 짙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시기 어떠한 성격의 산업화였는가"라는 정치경제적 성격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선택적 친화력과 경제발전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가까운 아시아 몇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자.

3. "네 마리용"과 "IMF 위기"

한국은 대만·싱가포르·홍콩 등과 아울러 네 마리의 용이라 불리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과 아울러 IMF 경제파산을 경험하였다. 근대화, 또는 중공업화로 표현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성적표는 "네마리 용"이라는 기적과 "IMF 위기",⁸⁾ 그 중간 어디일지도 모른다.

1) 동아시아 3국의 "IMF 위기"

(1) 필리핀: 필리핀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미국이 개입하였다. 미국은 1965년 북베트남 폭격으로 베트남전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데, 그해 12월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등은 미국의 핵심기지였고, 필리핀은 막대한 임대료를 받게되었다. 마르코스는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미국은 정치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70년대 베트남전이 종결되어 가고, 미중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여전히 권좌에서 독재를 강화하였고, 중산층의 반대운동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 강화되었다. 즉 필리핀의 냉전적 가치는 현격히 떨어졌지만, 냉전의 유제는 내부에서 대립되고 있었다.

8. 4마리 용의 공통성은 다른 글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지면의 제한이 있는 여기서는 IMF 위기를 겪은 세나라의 경험을 주로 소개한다. Benedict Anderson, 1998. 4, "South-East Asia: From Miracle to Crash," London Review of Books(www.lrs.co.uk), vol 20. no. 8.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는 마르코스 정권의 유용성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CIA 등이 필리핀의 정치적 전환에 개입하였다. 1982년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민주화정책을 추진하였고, 쿠데타 시도는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후 필리핀 내에서 냉전체제는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공산주의 분파도 분산되었다. 민주화와 아울러 경제발전이 진행되던 중 1986년 갑자기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은 냉전적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90년대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태국: 태국은 1930년대 말 일본의 동맹국으로 태평양전쟁을 치루었고, 종전 이후에는 동남아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전선국가(frontline state)가 되었다. 1947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미국과 결합하였으며, 미국 또한 초대대사로 OSS국장이었던 전설적 인물인 "Wild Bill" Donovan을 파견하였다. 그후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역시 정점을 이룬 것은 베트남전 시기였다. 당시 태국에는 5만의 미군이 주둔하였으며, 많은 기지들이 있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었고, 60년대 이후 옛 동맹국인 일본도 대대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 태국에는 70년대 중반 중산층이 발달하게 되었다. 동남아의 냉전전선의 변화(베트남전의 종식과 미중관계 개선)에 따라 73년 10월 방콕에서 중산층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미국 개입 반대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났다. 왕마저 수상을 불신임하여, 군부 독재자를 축출하였다. 이후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화가 진척되으나, 1976년 10월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 학생들과 진보주의자들은 좌경화되어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학생들을 사면하는 등 유연화정책을 실시하여, 1978-79년 중국·캄보디아·베트남전쟁의 시기에도 안정되었다. 1970년대 태국은 쿠데타와 민주화가 점철되는 과도기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태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냉전에서 벗어났으며, 경제적인 부흥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군인과 관리 등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지역귀족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1991년 군부가 재집권하였으나, 1992년 "피의 5월" 중산층의 대중봉기에 의해 다시 축출되었다. 이후 세계화와 특권층과 관료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1997년 바트화의 붕괴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하였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격변과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태국은 냉전체제에서는 벗어났으며,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태국은 비교적 냉전적 군부 독재하의 경제발전과 탈냉전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극단적인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는 국내적 배경으로는 왕국이라는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가 집권하던 인도네시아는 1964-65년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붕괴에 당면하였다. 수하르트 장군은 진보적 인민주의자 수카르노를 제거하고, 65년 10월-66년 1월 사이 50만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를 대대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미국 지지를 선언하였다. 1966년 봄, 인도네시아에서는 냉전적 군사독재권력이 탄생하였다.

수하르트는 미국의 정책에 충실히 호응하였고, 미국은 이에 충분히 보상하였다. 미국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재건하였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소련의 인공위성을 피해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것을 묵인하는 비밀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신 워싱턴은 미국·일본·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으로 '인도네시아를 위한 정부간 조직(Intergovernmental Group for Indonesia: IGGI)'을 결성하여, 인도네시아에 꾸준히 투자하였다. 이것이 1970-90년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기적의 원동력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냉전과 이에 대한 지원은 월남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1975년 12월, 수하르트가 동티모르 침공을 결정하였을 때, 미국은 극히 환영하였다. 포드·카터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를 변호하였고, 베트남전에 사용한 살상 무기들을 공급하였다. 1975-97년 동티모르에서는 인구의 1/3인 20만이 죽었다.

수하르트의 권력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군부독재정권이었다. 항공산업에까지 진출하고자 하였던 수하르트는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었다. 소련·동구의 해체로 냉전적 보호와 지원이 해체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학생과 군부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위기가 일어났다. 아울러 화교 등의 민족문제, 동티모르 문제 등이 결합되어 거대한 격동에 휩싸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4) 종합:

① 이들은 대체로 소련·중국·북한·베트남 등과 인접하였거나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미국의 "초생달 방어선" 또는 "냉전의 호(弧)"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어떤 지역보다도 "냉전"이 "뜨겁게"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반공독재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태국의 군부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정권 등이 그것이다.

② 이들의 경제성장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과 중국이었다. 일본은 한국전쟁·베트남 전쟁 등 냉전시절 아시아의 열전을 배경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다시 냉전지대의 경제건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유하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자본주의국가가 협조적으로 개입하였고(이른바 '이중해게모니'), 오랜 시기 동안 선진적 세계시장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었다. 또한 세계최대의 인구를 지닌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따라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동아시아 각국의 유력한 인근 대국은 경쟁에서 제외되었다.

③ 1970년대 베트남전의 종전과 미중 수교 이후 이 지역은 단계별 냉전 해체에 들어갔다. 태국과 필리핀은 1970년대를 과도기로 하여, 1980년대에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에 들어와 냉전해체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④ 냉전의 해체로 인한 과도기에 동아시아는 민주화 이외에 몇가지 변화를 겪게되었다. 먼저 미일 2중 해게모니에서 "미국=정치군사, 일본=경제"라는 분업적 성격도 해체되어 경제·시장에

서 서로 충돌하였고, 40년간 보호되던 현지 시장의 장벽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유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였다.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국가주도의 낙후된 금융시장은 국제자본과 만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2) "기적"과 "붕괴" 사이

이상 언급된 세 나라의 간략한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며, 몇몇 중요한 특징들은 박정희 정권도 공유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4·19가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시기 쿠데타를 단행하였다.⁹⁾ 흔히 그가 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한 반공 국시를 의례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이것은 분단 한반도가 지닌 정치군사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박정희가 모두에 즐겨 사용하던 "우리는 냉전의 최첨단에 위치한 분단국가로써"는 결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다. 박정권은 일본과 수교하였고,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로스토우의 근대화노선으로 대표되는 제삼세계 개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박정희정권의 근대화 노선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의 조짐과 베트남전의 종결 분위기로 아시아에서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던 시기, 그는 7·4 공동성명과 아울러 유신을 선택하였다. 5·16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냉전적 분단이 유신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흔히 무시되어 왔다.¹⁰⁾ 권력 장악후 근대화를 추진하였듯이, 유신으로 권력을 집중화한 그는 중공업화를 추진하였다.¹¹⁾ 이처럼 근대화나 중공업화는 반공과 냉전에 의해 초청된 것이었다.¹²⁾

모두에 인용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고민은 한국현대사의 진면목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그의 고민은 북한에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과 강대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미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도 이기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유신 말기는 극심한 독재와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자신의 암살을 초래하였다.

9. 정창현, 1993.

10. "북한공산주의 정권과 남북한 대화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국내 결속이 필요하고, 국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관계 당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박대통령은 중앙정보부의 건의에 대하여 찬의를 표했다"(김정림, 1997, 『아 박정희』, 중앙M&A, 159-60쪽). 박정희 본인도 비슷한 언급을 하였다. "주변정세의 격동과 긴박한 안보의 위기에 직면하여 민족의 활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이다. 나는 우리가 전례없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 하나는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연 것이요.....또 하나의 중요한 결단은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국력배양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국정전반에 걸친 유신적 개혁이었다"(박정희, 1978, 『민족 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54-55쪽).

11. 유신체제가 중공업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중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신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김일영, 1995)는 지적은 정당하다.

12.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리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민족 중흥의 길』 130쪽).

박정희 정권을 형태적으로 비교하면 사회민주주의가 풍미하거나 조짐을 보일 때 군부를 통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25년과 18년의 장기집권이라는 점에서, 의존적 근대화를 축으로 민족주의를 보조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월남전 이후 냉전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노골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장기집권하였다는 점에서, 군부와 관료의 권력화와 이에 대한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요구라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정권과 가장 흡사하다.

물론 한국은 전통과 내부적인 기반 등에서 위의 나라와 다르며, 인간 박정희와 정권의 리더십 또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차이가 없을 수 없다. 즉 한국은 남북 분단으로 북한과 끊임없는 체제경쟁을 하였으며, 토지개혁과 한국전쟁 등으로 전통적 지배계급은 태국이나 필리핀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의식 수준·문자해독률 등은 위의 나라들보다 현저히 앞선다. 또한 박정희 개인의 지도력이나 청렴성, 정권의 경제적 능력과 성취도 위의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도력의 차이보다는 국민 수준의 차이가 더 현저하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대만·싱가포르·홍콩 등과 비교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이 나라들은 국내시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외지향적인 개발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 자유롭고, 정부의 경제개입 또한 우리보다 한정되어, 요컨대 시장의 자율성이 우리보다 높다. 또한 재벌의 경제 집중이나 정경 유착 등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이 지니는 부작용도 적다. 이들은 아시아의 독감(IMF 위기)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가볍게 이겨내고 있다. 이것이 구조, 즉 한국과 한국인들이 이들보다 못하거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권과 지도력의 문제인가. 여기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지도력의 상한선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박정권은 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독재정권이라는 폭력성에서, 경제적 근대화라는 점에서, 둘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유능성의 수준은 대만·싱가포르·홍콩 등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반공적 냉전체제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는 정치주권적 폭력성과 경제적 근대화 사이의 '묘한 함수관계'이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해 독재적 폭력이 불가피하게 동원되었다기보다, 반공과 냉전의 독재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성장이 동원되었다. 1950년대 제삼세계의 약진과 좌경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1960년대 케네디 정권은 근대화 정책이라는 '빵'과, 사회주의의 선전력에 맞설 수 있는 '의사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부여하였다. 냉전체제의 최전방에 있던 박정희정권은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하우스에 속한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적 친화력"이란 "선택된 친화력"에 가까우며, '개발독재(개발을 위한 독재)'라는 개념도 '반공독재를 위한 개발'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명치유신 등의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계급적 균형관계에서 자율성을 활용하는 보나파티즘 등과 구별되는 것이다. 박정희의 등장과, 경제적인 발전도, 심지어 몰락도 자율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미일의 이중 헤게모니 하에서 구축된 냉전의 전사였고, 경제적 발전 또한 냉전 이익을 활용하는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한 경제발전은 민주적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경유착에 의한 자본의 집중, 억압에 의한 노동의 동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³⁾ 그리고 그것은 세계금융자본의 공세 앞에서 IMF 위기를 초래하였다. “자살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는 경험은 선진국이 아니라, 마치 예언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다.

4. 맺음말: 냉전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발전이 지니는 성격이 대체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향수가 남아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강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 과장된 청렴성에 대한 신봉,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감정에의 구속 등 낙후와 몽매의 소산인가. 그러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먼저 “김영삼 정권의 경제적 실패가 죽은 박정희를 불러내었다”는 세간의 속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대중들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혁을 잘하면 박정희 향수는 없어질 것이라는 진단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의 경박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정권시절 노동과 땀으로 이룬 성과마저 청산주의로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¹⁴⁾ 세계화의 와중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파산과 직장에서의 추방은 “현재는 박정희식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계의 금융자본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냉소하였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결코 선진적 모범은 아니지만, 과거의 성과를 청산주의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세계화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만은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¹⁵⁾ 세계화가 박정희시절 노동과 땀으로 이룩한 성과마저 까먹는 약탈성을 보일 때,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여전히 대중적 근거를 지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이다. 박정희 이후 대통령들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릴 정도였고, 흔히 말하는 3김도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다. 또한 “이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지나갔고” 등으로 시작되는 언설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중도반단시킨다. 한국에서 ‘민주’란 과연 무엇이며, 이제 성취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대중적 수준은 청와대나 의사당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생활속 민주주의의 일상화, 나아가 독재의 뿌리였던 냉전적 분단에 대한 비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확대된 세계관을 얻지 못하고 현실의 활력을 잃어버리자, 이에 대한 가치 평가는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정치에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경제만 남게 되는 것

13. Paul Krugman,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in Foreign Affairs, vol.73(Nov/Dec).
14. 중국에서 봉건제하 일체의 사물이 봉건적인 것으로 독해하는 泛封建論이 청산주의로 심각한 폐해를 주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비슷하게 박정희정권기의 모든 것이 박정희적인 것은 아니다.
15. 도진순, 1998.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당대비평』 3, 서울: 당대.

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민족의 자주, 남북의 통일과 이어지는 생활력을 가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박정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박정희 향수는 깊은 구조에서 한반도에는 냉전 해체가 아직 생활의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주한미대사 보쓰워드의 취임 직후 첫 연설(1998. 1)에서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① 안보, ② 경제, ③ 민주주의로 정리한 바 있다.¹⁶⁾ 안보와 경제 사이의 간극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안보가 우위에 놓여 있으며, 안보는 아직 냉전과 결합되어 있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지만, 아직 분단적 제약의 틀을 깨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남한·북한·미국의 평화적 삼각관계가 모색되면서, 한반도에서 냉전은 해체과정에 돌입할 것이며,¹⁷⁾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변화할 수 있다.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일어났다. 이러한 근원적 구조의 변화는 21세기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약간의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수교협상에 10년 정도, 자체 정비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 80년대 중반부터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였다. 북한에서는 언제 이러한 발전적 변화가 일어날 지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 북미간에 관계정상화가 도정에 올랐으며, 북한 경제가 바닥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1996년 양안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국제자본들이 일제히 빠져나갈 때, 대만은 금융체계를 정비하여 자생력을 배양하는 개혁을 하였다. 이것이 대만이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피해나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같은 해 동해안 잠수정 사건 때, 남북간에 긴장은 고조되었지만, 미국의 군사적 중재하에 있는 우리의 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해 경제위기가 상륙하였다.

앞으로도 1996년처럼 남북관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견재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다시 대만과 유사한 상황이 될 경우, 박정희가 우려한 자살과 정신병원으로 가지 않으려면, 박정희식 냉전적 보호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16. “First, the Korea-U.S. security alliance...The second element of our relationship is economic.....The third element of our relationship is philosophical -- our shared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democratic practic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Stephen Bosworth, TRANSCRIPT: REMARKS BY AMB. BOSWORTH ON U.S.-KOREA RELATIONS: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Continuity and Change”, 1998. 1. 23.
17. 도진순, 1999, 「분단에 대한 연역과 통일의 전제」, 『당대비평』 6(봄)호.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방향

박 찬 승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부교수

1. 대통령기념관과 대통령 기록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기념관'의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어떤 인물을 추모한다든가 사건을 기념한다든가 아니면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경우 그 기준은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등 유교적 이념과 밀접한 연결을 가졌다. 그리고 그 기념물은 대체로 개인에 대한 사당 혹은 비석 등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념하거나 추모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 평등, 민주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가주의 내지 민족주의가 지배해온 사회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주로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봉사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이 그러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한 기념물들이다. 최근에는 4·19기념관, 5·18기념관, 민주화운동 기념관 등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민주주의도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기념관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국가와 민족에 대한 봉사? 경제발전? 하지만 이 대목에는 너무나 많은 논란거리가 남아있다.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박정희기념관을 운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박정희기념관의 문제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이 법률과 시행령 가운데 관계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8.2.24]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88.3.18]

혹자는 위의 조항들을 원용하여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는 법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특히 기념관 건립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하는 상황에서만, 그것도 매우 한정된 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기념관(Presidential Memorial)의 건립은 제퍼슨,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극소수의 위대한 대통령에 한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본다면 조선왕조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장군의 경우가 이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김구선생 정도나 이에 비견될까 다른 경우는 아직 거론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더욱이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불명예스럽게 정권을 장악했거나 퇴진하였고, 또는 이렇다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대통령기념관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욱 필요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기록 보존이 체계적으로 되어오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관련 문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록자체의 생산과 보존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임시 자기가 만든 기록들을 사유물처럼 생각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남아 있는 대통령문서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문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문서관리규정」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도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다.

보존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문서관리규정」으로 인해 영구문서로 분류되지 못한 자료들은 그 역사적 가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폐기 처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문서관리규정은 문서의 보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문서의 폐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과도 같았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이러한 문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작년말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금년 초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해방 이후 실로 50여년 만에 기록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 제2조, 제8조, 제13조에 '대통령기록관'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 제8조의 내용을 보면 "第8條(大統領記錄館)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관련 시행령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기념관 건립 문제를 대통령기록관 건립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만든 기록관리법의 취지에도 맞고, 또 시의성의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관련 기록물들이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체제와 예산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직 대통령관련 기록을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보완하여 전직대통령기록관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절실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대통령기록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기록관제도가 가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2.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제도

흔히 Presidential Library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은 1941년 개관한 루즈벨트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각 대통령 별로 기록관이 설립되어 현재 10곳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현황

명칭	연방정부기 증 연월	소재지
루즈벨트대통령기록관	1941.6	뉴욕주 하이드 파크
트루먼대통령기록관	1957.4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아이젠하워대통령기록관	1962.5	캔사스주 에이벌린
케네디대통령기록관	1979.10	매사추세츠주립대학(보스톤)
존슨대통령기록관	1965.10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포드대통령기록관	1981	미시간주립대학
카터대통령기록관	1986	조지아주 아틀란타
부시대통령기록관	1997	텍사스주 켈리지 스테이션
레이건대통령기록관		캘리포니아주 시미 벨리
후버대통령기록관	1964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랜치

위와 같이 1930년대 이후 재직한 대통령 가운데 닉슨을 제외한 모든 이의 대통령기록관이 현재 건립되어 있다. 닉슨대통령의 기록의 경우는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처음 구상한 것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였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의 경우, 대통령 재직시 만들어진 공적 사적인 기록을 모두 사유물로 간주하여 퇴직할 때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갔다. 또 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든 기록물들을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하여 개인이 보관하였다. 따라서 그 루즈벨트 이전의 기록물들은 국회도서관에 보관되기도 하였고, 역사관련 학회 등 단체에 의해 보존되기도 하였고, 후손이나 개인컬렉션에 의해 보존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많은 기록들이 산일되었고, 또 고의로 인멸되기도 했다.¹⁸⁾

1937년 루즈벨트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를 뉴욕의 하이드 파크에 문서고를 지어 보관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초대 국립기록관리청장 로버트 코너에게 그 일을 맡겼고, 1938년 12월 기금을 모으기 위한 대통령기록관건립추진위원회와,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추진위가 모금한 돈은 모두 40만불에 달했고, 이로부터 '민간의 모금에 의한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라는 전통이 세워졌다. 기록관은 건립 이후 국립기록관리청에 양도되어 이후 관리는 정부기록관리청에서 맡게 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은 대통령기록 보존에 관한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당시까지 사유물이었던 대통령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또 대중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곳에서는 대통령 측근 인물들의 기록물도 수집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넓혀놓았다. 또 기록관의 설립과정에서 학자들

18) <http://www.nara.president/overview.html>

이 대거 참여하고, 건립 후 운영을 국립기록관리청에 맡김으로써 정치적 성격을 피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19)

1941년 루즈벨트가 대통령기록관을 국립기록관리청에 기증할 때 했던 다음의 연설문은 그가 대통령기록관을 왜 세우고자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한 곳에 보관하여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다음의 3가지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첫째, 과거를 믿어야 한다.

둘째, 미래를 믿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국민들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국민들이 과거로부터 배워, 그들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20)

루즈벨트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구상은 역사에 대한 신뢰, 국민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다. 1950년 트루만대통령도 역시 대통령기록관을 세울 것을 구상하고, 의회에 대통령기록관제도를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제화는 그의 재임중에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트루만은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이 개인의 기념관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센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1954년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시가 부지를 제공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완공되자 동년 4월 이를 연방정부에 기증하였으며, 기록관에 국내외문제연구소를 설치하여 기록관이 단순히 기록의 보존처만이 아니라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21)

국립기록관리청은 1955년 대통령기록관에 관한 행정관리를 법령으로 만들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의회는 청문회 등을 거쳐 그해 8월 상하원 만장일치로 「대통령기록관법」을 통과시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를 공포했다. 이 법에서는 민간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세우고, 연방정부(국립기록관리청)가 이를 기증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했다. 이후 세워진 9개의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이 법에 의거해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은 법의 적용대상을 법 제정 시점에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및 미래의 대통령에게만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수집의 범위를 대통령이 공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던 기간 중에 생산한 문서, 그리고 그를 수행한 측근 인사들과 집단의 기록으로 규정하였다.

트루만 대통령기록관에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이 1962년 완공되어 연방정부에 양도되었다. 특기할 것은 아이젠하워대통령 기록관은 컬럼비아대학교와 함께 구술사(oral history)자료 수집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사업을 통해 아이

19) 이상민,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1999, 서양사학회 발표문)

20) 주 1)과 같음

21) 이상민, 앞의 글

젠하워 대통령 시기의 귀중한 증언들이 채록될 수 있었고, 구술사의 방법론도 크게 개발되었다. 이후 모든 대통령기록관에서 구술사자료의 수집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은 존스 홉킨스대학교와 함께 대통령기록물선집을 발간하였다.

케네디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63년 그가 암살된 뒤 국립기록보존소장과 총무처장관은 케네디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구술사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케네디대통령기록관은 3천6백만명의 성금과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의 부지 제공으로 1979년 10월 준공되었다.

케네디의 후임이었던 존슨대통령의 기록관은 1965년 재임중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부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서서 1971년 완공되어 연방정부에 기증되었다. 포드대통령의 경우, 미시간주립대학(앤 아버 소재)에서 그가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자 설립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기금을 모아 건축을 시작하여 1981년 대학 구내에 포드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었다. 부시대통령기록관의 경우도 대학이 설립을 주도한 경우이다. 1989년 4개의 대학이 대통령기록관의 유치 경쟁을 벌여 텍사스 A&M대학이 선정되어 건립 과정을 거쳐 1997년 개관하였다.

카터 대통령기록관도 그의 재임중인 1980년 국립기록관리청이 이미 작업에 착수하여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시내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땅의 소유주인 주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2천6백만불의 기금을 모아 1984년 착공되어 1986년 준공되었다. 그리고 부지선정, 건물의 설계, 전체 프로그램의 구상 등에 국립기록관리청의 아키비스트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특기할 것은 카터를 비롯하여 최근 대통령기록관에는 퇴임후 그의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22)

미국의 대통령기록관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한 제도의 변화이다.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이 제정되기까지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대통령 자신, 학자, 그리고 법률가들의 일관된 생각들이었다. 1978년까지 건립된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이러한 의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과 그의 스탭들은 이임 시에 자신의 기록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루즈벨트 이후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고, 국립기록관리청에서는 이들을 설득하여 그 자료들을 국가에 기증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8년의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백악관보좌관의 공식 기록물은 모두 미국 정부의 소유로 규정하였다. 즉 대통령기록물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주거나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보좌관실 혹은 대

22) <http://carterlibrary.galilo.peachnet.edu/museum/libhis.htm>

통령비서실에 속한 개인이나 업무조직에 의해서 혹은 대통령자신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형태의 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을 말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공식기록물, 개인기록물, 대통령의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당 활동 및 대통령선거관련 기록물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완전한 소유권, 점유권 및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닉슨대통령이 사임 후 자신의 기록물의 공개 등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 최대 12년까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통령기록관법」은 1986년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연방정부에 출연기여금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정부가 민간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념관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의 건립 지원이다). 또 대통령기념관 건립이 너무 호사스럽게 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건립 시에 거두는 민간기부금은 시설의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그 일부를 기록관의 운영비로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10개의 대통령기록관들은 현재 국립기록관리청의 대통령기록관리실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들은 크게 보면 다른 국가기록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 수집, 보존, 이용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의 대부분의 이름이 'Library and Museum'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기록관은 크게 보면 아카이브즈(자료실)와 전시관으로 나뉘어진다. 아카이브즈 부분은 다시 문서고, 열람실, 작업실 등의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아카이브즈 부분은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이며, 전적으로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운영된다. 대통령기록관을 찾는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케네디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한 해 2천명이 넘는다. 하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역시 전시관이다. 전시관은 대통령 개인의 일대기와 대통령 재직시의 공적, 관련 유품과 자료 등을 전시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전문 아키비스트에 의해 그 전시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그밖에 강연실 등을 두어 교육의 장으로 삼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자료를 올림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의 대통령기록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의 대통령기록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해보자. 이에 관해서는 최근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중략)

5. "專門管理機關"이라 함은 記錄物管理機關중 永久保存을 위한 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고 記錄物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다음 各號의 機關을 말한다.

가. 中央記錄物管理機關

나. 特殊記錄物管理機關

다. 地方記錄物管理機關

라. 大統領記錄館

마. 기타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

第8條(大統領記錄館)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13條(大統領관련 記錄物管理)

①大統領과 그 補佐機關이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生産 또는 접수한 모든 記錄物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이 이를 蒐集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無斷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는 公共機關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生産 또는 접수한 公共機關의 長은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원활한 蒐集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目錄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종료 6月前부터 任期종료까지의 기간 중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蒐集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大統領에게 引繼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29조(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기록물

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3. 각급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

4. 대통령 또는 차관급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메모노트·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8.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년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처리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 임기종료 2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 임기종료 40일 전까지 다음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20일전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계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선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록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안)은 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그 관리와 인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기록은 일단은 청와대 안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한 규정 등이 상세하지 않다.

또 이 법률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는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도 전직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고, 1999년 1월 1일 시점의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기록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아래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 산하에 대통령기록관 리국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을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든다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 소속으로 둔다고 한 규정에서 정부가 직접 만든다고 하는 뜻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법규정대로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아마도 퇴임이후 정부에서 직접 건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기록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기록관을 전혀 만들지 않고 퇴임한 대통령 자신이나 그 후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기록을 소유하고 있도록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기록은 흩어지거나 인멸되고, 나아가 국민들로서는 그 기록을 전혀 볼 수 없게 놓아두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현대사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개인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윤보선, 최규하 등 잠시 대통령을 거쳐간 인물들, 또 쿠데타로 집권하여 대통령이 된 인물들의 경우에는 굳이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둘 내지 세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과연 기념관을 따로 지어 보존할 만큼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가, 또 국가가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투자를 할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앞서 말했다시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만한 전직 대통령이 없는 현실에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 민간 차원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지원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은 대통령기록이라는 공적 기록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념사업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즉 기념사업의 지원을 규정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이를 추진할 수 없다.

셋째는 정부가 나서서 역대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의 기록, 그리고 그 시대와 관련된 국내외 기록과 증언들을 한 데 모아 보존하는 것이다. 그 경우 대통령기록관은 외국에 있는 현대사자료의 수집 센터로서의 구실도 아울러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경우 건립 비용의 절약, 자료 수집과 이용의 효율성, 정치적 공방으로부터의 자유 등 많은 이점이 있다. 물론 이 대통령기록관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전직대통령기록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위의 세 가지 안 가운데 세 번째 안을 권하고 싶다. 불행했던 한국 현대사의 현실이 이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또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내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가장 편리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익이 없는 대통령기념관은 하루 빨리 포기해야 한다. 대신 루즈벨트처럼 역사와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미래의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토론요지

임지현

한양대 사학과

나는 주로 박정희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시각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사회 일각에 완강하게 자리 잡은 견해, 즉 독재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역사적 업적을 온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적 타당성을 지닌다. 김정일이 정주영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는 언론보도는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근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그것은 다시 21세기의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근대성”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문제는 쟁점의 표면에 떠오른 박정희 기념관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 기호 혹은 상징으로서의 박정희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억되고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 논의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논의의 발단이 어찌됐든, 그것은 이미 집권당의 선거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국민의 역사적 기억을 “박정희적 근대”의 틀에 맞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는 틀을 강요하는 권력의 논리이며 건강한 미래의 모색을 질식시킨다.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시장 스탈린주의자”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을 경제성장과 동일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유, 해방과 같은 근대의 가치를 사상시켰다. 경제성장의 초점은 민중의 삶의 질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에 맞추어졌다. 그것은 수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스탈린의 발전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국가주의적 경제의 양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후진국 러시아를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스탈린의 업적은 사실상 박정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각각 부정과 긍정의 극과 극을 달린다면, 그것은 논리적 정신분열증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분열증이 내가 토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니다. 문제는 박정희 기념관으로 표출된 ‘국민정부’의 역사관이다. 현 정권도 물론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정립하고 그것을 피력할 자유가 있다. 국민정부의 역사관에서 현재를 변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적 상상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역사적 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정희에 대한 그들 나름의 역사적 평가와 공식적인 역사 기념관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역사이해를 정부가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지향하는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국민들이 만들어어나가는 것이지, 권력이 강제하는 공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토론문>

우리 안에 있는 敵, 박정희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정치권에서 박정희 향수병이 다시 도진 것을 보니 정치의 계절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된다. 92년, 97년 대선국면에서 기승을 부렸고 이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르게 생겼다. 박정희 독재의 최대의 희생자로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김대중대통령이 기념관 사업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증폭된 느낌이다. 현재 민간의 소장학자들이 추진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차라리 순서가 아닌가. 도대체 왜 또 다시 박정희인가?

혹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과거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 현실의 모든 향수는 과거에 존재했던 향수의 대상을 막무가내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과장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과거를 신비화하고 절대화함으로써 급기야 현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과 대응능력을 스스로 봉쇄한다. ‘박정희는 국가를 위한 애국적 일념으로 살았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 ‘박정희는 경제를 발전시켜 나라경제를 일으켰다’ 등등 대충 이런 식이다. 잘 된 것은 모두 박정희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진다. 그리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박정희식으로 청산해보자는 파괴적 자기부정에 도달한다.

물론 박정희 향수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던 상태에서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비만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공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 아니냐고 생각한다. 또 혹자는 박정희의 독재를 비난하지만 독재 안하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도 한다. 경제 제일주의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정말 독재가 필요했다면 독재란 필요악이었을 뿐이라는 평가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자. 정경유착, 지역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 아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연, 혈연, 학연 등 극히 전근대적인 원리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공개성, 합리성, 공정성의 원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최근 큰 기업이 쓰러지는 일들도 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견고하게 남아 있는 박정희식 독재구조의 산물이다. 말만 민주주의이지 그 출발점인 정당이 일인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민주주의가 그 기초에서부터 부정되는 우리의 현실도 박정희 독재의 산물이다. 참으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박정희는 민주 한국건설의 장애이고 극복 대상이다.

독재를 위한 경제개발이건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독재였건 그것은 학술적 논쟁점으로 계속 남겠지만 한국의 경제개발의 내용과 방식은 철저히 그 일부 추진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고, 이 이익에 반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사회적 활동도 무자비하게 억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추상적인 권위주의, 추상적인 경제개발을 넘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결론은 보다 손쉽게 나리라고 본다.

박정희 신드롬을 억제해야 할 현정권이 그에 앞장서는 데는 이른바 '동서화합'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죽은 박정희의 음덕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이 일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대중의 여론이 이 흐름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계산과 시도도 먹혀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론조사 등을 보면 결코 국민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나는 계몽적 관점에서 국민을 상대로 그런 경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식인들이 반복해서 말을 해도 잘 되지 않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박정희는 우리로부터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죽은지 20년이 넘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박정희의 여러 모습을 내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박정희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보다 박정희 체제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 체제의 일부로서 각자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그 체제가 요구하는 삼상을 가진 인간으로 생산되었다고 본다. 위정자나 권력자들은 권력이나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있고, 도덕적인 인간은 병신이고 그러면서도 가정에 들어가서는 점잖은 가장이다. 내 딸은 안되지만 남의 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접대문화는 우리의 얼굴이다.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에 접대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전세계 어디에도 본적이 없다. 힘없는 사람은 순응하는 것이 미덕이고 내 가족이나 잘되면 되지 남의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공인의식 제로의 국민이 한국사람이다. 법치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조소거리이다. 그러니 잘 되지 않으면 박정희 식으로 때려 업자는 논리가 은밀히 고개를 드는 것이다. 일어난만에 사라질 박정희 망령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적에 대한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라는 목표를 진정으로(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위험한 생각은 사라진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지식인과 진보세력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느끼고 한층 희생과 노력을 각오해야 마땅하다. 다른 그 누구도 이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기운의 불씨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토론문>

박정희와 오늘

이 우 영
통일연구원 · 사회학

1. 여전히 남아있는 자취들

○ 프로야구에서 홈런을 친 선수에게 병이 날아가는 등 관중들의 난동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행히 상대편 버스를 태우지는 않았다. 물론 프로야구는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생사의 문제로 즉 전쟁의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밟아야 하고,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기면 끝이다. 반칙이나 담합을 하더라도 승패가 뒤 바뀌지 않는다. 투철한 군인정신.

○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국민학교와 소학교. 앞은 한국 뒤는 일본. 태평양전쟁과 더불어 만들어진 국민학교란 이름이 전쟁 후 바뀌는 데, 40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에만. 일본은? 종전 후 바로 원위치 하였다. 일본에의 향수. 정확히 말한다면 일본 군국주의에의 향수. 나찌도 일제도 '민족의 이름으로'였다. 민족발전이 전체주의로만 달성 가능한가? 사무라이 정신은 장난 삼아 살인의 대상이 된 평민들의 피를 깔고 있다. 문제는 전체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파시즘과 자유주의의 차이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 문화 상품 중 아니 전체 일본 상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대중 가요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겐 경쟁력이 있다. 아이들은 팬클럽을 만들면서 즐기고, 어른들은 술한잔 걸치고 자랑스럽게 부른다. 일본말이 필수과목도 아니며, 공식적으로 유통되지도 않는 일본 노래이지만 항상 표절의 대상이다. 여전히 꿈꾸는 일본. TV도 우리시대의 아이돌도,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 항상 세계적인 수준에 뒤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우리에게 에이즈나 암과 같은 극복 불가능한 대상인가? 안전 불감증은 한국 민족의 내재적 본성인가? 그렇지 않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이 죽은 사람들 위로금 보다 더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안쓰는 것 뿐이다. 인간보다 건설이 중요하다. 인간은 많고, 성장은 필요하다. 고지 점령을 위해서는 병력손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말했는가를 놓고 다툼이 한창이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안 하였기를 바란다. 국민학교 어린이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목숨과 바꿀 수가 있는가? 때린다고 하면 공산당이 좋다고 해

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 굶는 사람, 헐벗은 아이를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특히 어린이의 본성일텐데 우리의 아이들은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 공산당이기에 때문에.

2. 왜 지금인가?

○ 근대화와 효율성을 이야기한다. 효율성은 비용의 문제이다. 그러나 항상 계산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비용뿐이다.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박정희 시대에 간치고,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단 제외하자. 왜냐하면 전혀 개인적인 비용이니까. 산업화의 부산물인 환경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지역갈등에 소모되는 비용, 계급갈등에 치러지는 비용, 군대식 일본식 교육에 버려지는 비용, 크게는 정경유착에 작게는 촌지에 들어가는 비용. 정말로 박정희 시대는 효율적이었는가? 남는 장사였는가?

○ 박정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시대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들과 이들에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조하였던 시민사회가 공범이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박정희 시대가 이루었던 경제성장에도 적용된다. 그가 성장을 이룩한 것이 아니다. 그의 관료와 재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름 없는 많은 '산업전사'들이 성장의 주축이었다.

○ 박정희 혹은 박정희 시대의 논란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가 한국 근대사나 산업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분단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로 인해 해방공간,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장면 정부에 관한 분석도 풍부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한다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평가가 '비로소'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안 되어있고, 연구도 안되어 있는 시점에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인가? 그가 한 정책은 고사하고 개인에 대한 기록마저 분석은커녕 정리도 안되어 있다.

○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고 존경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나찌즘의 신봉자는 히틀러를 존경하는 행사를 가질 수도 있고,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인 기념관은 아니다.

○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박정희 시대로부터 아니, 해방이전부터 분단을 거쳐 늘 따뜻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념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자료】 1

『조선일보』 5/10(월)

정부, '박정희기념관' 건립 지원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곧 있을 김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에서 경북도 등에서 기념관 건립을 건의해 올 경우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념관 건립 문제는 그간 IMF(국제통화기금)사태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아직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건립 장소는 박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중흥동지회 백남익회장은 "청와대측으로부터 기념관 문제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되면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조선일보』 1999년 5월 13일/14일

DJ, 박 전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박 전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박 전대통령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박 전대통령이} 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역사 속에서 재평가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박해 받았지만 다 청산...오늘 다시 화해"

" [김대통령] 박 전대통령과 '역사적 화해'"

김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비롯, 박 전대통령 기념사업 관련자 32명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의근 경북도지사로부터 기념관건립 예산으로 7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은 민간주도로 하고 예산은 민간모금과 정부 재정 지원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금 모금을 허가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면 국민호응도 클 것이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신현확 전 총리에게 이 사업의 추진을 책임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지역에서 뜻있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희망했고, 신 전 총리는 이를 승낙했다. 김대통령은 {정부 수립후 전직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없었으나 그런 속에서 박 전대통령은 국민 속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근대화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확신감을 갖게 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은 큰 공로}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내가 과거 박해도 받았지만 다 청산하고 박 전대통령과 오늘 다시 화해하고 다

시 한번 내 입으로 그분을 재평가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뜻이 있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분들도 감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사람을 아끼는, 또 지도자에게서 좋은 점을 따르는 예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대통령도 지하에서 마음 흡족히 생각하고 또 이것이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념사업 추진위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고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홍준호기자)

『조선일보』 05/14(금)

[사이버 논쟁] 박정희기념관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구를 방문,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지원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PC통신망에서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천리안은 김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 조사 코너를 개설했다. 이 조사에서 반대(14일 오후 3시 현재 찬성 150명 반대 172명)가 다소 많은 추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네티즌들이 군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던 경향에 비하면 찬성 비율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반대쪽 의견을 낸 네티즌들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지원에 깔린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표시했다. "내년 총선에서 영남 표를 끌어모으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가 아니겠는가"(adamanto) "용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천리안 evrc001). 반면 지지 의사를 밝힌 네티즌들은 김 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 정신에 높은 점수를 줬다. "환영한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국민과 훗날의 국민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농어촌에 살고있는 우리 윗세대들에게 물어보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다."(소향무전). "박 전대통령의 독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이 역지로 역사를 부정하고 (박 전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통신) 그는 또 "박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는 구실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으나, 박 전대통령이 20% 정도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기념관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쟁은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다가 전두환 전대통령 기념관까지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닐까"(천리안 sinocent)", "김영삼 전대통령의 기념관은 절대로 설립하지 못한다"(천리안 Freeee), "수많은 세월이 흘러 양금들이 가라앉아 그럴 수도 있다고 접어두자.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kyki00).

(우병현기자 : @chosun.com)

『조선일보』 05/17(월)

[JP] "...'박정희기념관'내가 요청했다" 'DJ찬가'

김영삼 전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을 '독재자' 라고 맹렬히 비난한 17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김 대통령과 박 전대통령을 극찬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으켜놓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박 전대통령과 김 대통령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박 전대통령은 사심이 없었고, 김대통령은 참 많은 것을 잘 하시고 그 방법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박 전대통령 기념관과 관련, "(대선 전)공조를 할 때 내가 (김대통령에게)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92년 대선 때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지지기로 합의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조건 중의 하나로 내세웠었다. 김 총리는 이 사실도 밝히고 "(YS가)약속을 했는데, 취임 후 1년이 되니까 '5·16 이 역사를 다 후퇴시켰다'고 했다"면서

"결국은 안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대통령이 내각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여러 요인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거냐, 국가차원에서 옮겨 선택하고 결심하는거냐..."라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양상훈기자 : jhyang@chosun.com)

경향신문 [인물] 1999. 5. 19. 水

[독자의 소리] 박정희기념관 정부차원 건립은 곤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박전대통령에 대한 용서는 그가 피해자중 한 사람이기에 국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념관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통령의 말처럼 박전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경제를 회생시킨 점은 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위해 민주화의 퇴보와 많은 희생을 겪었다. 지금 박전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존경과 원망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본다. 민주화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희생한 이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신분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적 의지가 담긴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기념관 건립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특정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보다 현재까지의 대통령들의 업적과 과오를 후세가 판단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전시관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혁/bigdream21@hanmail.net>

『조선일보』 05/20(목)

북 조평통, 박정희기념관 건립 중단 주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에서 고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20일 중앙방송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를 통해 박정희 전대통령을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 「인간쓰레기」 등으로

비방하면서 「그의 행적에 대해 기념한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월초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해 광주방문 의향을 내비치면서 광주문제는 시간과 세월이 흘러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정의와 역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조평통은 남한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과 전 전대통령의 광주관련 「언행」을 묵인, 비호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남조선 집권자들이 선행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한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전 전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중앙일보 [사회] 1999. 5. 21. 金

민주재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재의

다음 달 초 창립하는 한국민주재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관' 을 설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민주재단 추진위원 김종배(金重培)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이창복(李昌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은 " '박정희 기념관' 도 추진되는 마당에 과거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전당(殿堂) 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며 "기념관 설립을 위해 정부 지원은 물론 '1국민 1벽돌 후원운동' 동도 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87년 6월 민주항쟁 12주년을 맞아 6월10일을 '민주의 날' 로 선포하고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6월 민주항쟁 12주년을 맞아 다음달 10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기념음악회가, 다음달 9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민주화운동 사료전시전' 이 열린다.

서익재 기자<ikjae@joongang.co.kr>

『조선일보』 06/22(화)

[이총재 간담회] "특검제 3년만 한시적 운용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기자들과 주례 간담회를 갖고, 금강산 관광도중 억류된 민영미씨 석방 문제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강산 관광객 억류에 대한 입장은.

"이 사건으로 정부를 압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결집이 가능할 것이다. 각종 대북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석방시켜야 한다."

---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나.

"워낙 북측이 불가촉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 특검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대상을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정하는 것

은 특검제의 취지나 국민의사에 어긋난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 한시적이라면 기한은.

"3년 전후면 되지 않을까."

--- 특검제 적용대상은.

"여야 협의로 하면 될 것이다. 옷너물 의혹 등 4대 의혹사건이 잦아들 것이다.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권 관련사건으로 공정수사를 기대하기 힘들 경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특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중립이다."

--- 특검제가 도입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하나.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실조사 차원이고, 특검제는 사법 처리가 목적이다. 옷너물 의혹 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 박근혜 의원이 21일 부총재직을 사퇴했는데.

"박정희기념관 관련 논평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박 전대통령 폄하에 대해 당이 비판하지 않은 것에 섭섭했던 모양이다. 당의 논평은, 박 대통령을 부정해오던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려면 역사평가부터 다시 하고 하라는 뜻이었다. 나도 기념관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최빈국 소리를 들을 때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산업화, 근대화를 일궈낸 공적은 그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의견일 것이다."

--- 박 의원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나.

"오해가 풀리면 잘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다. 우리 당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윤정호기자 : jhyoon@chosun.com)

『중앙일보』 1999. 7. 25. 日

[정가접속] '박정희 기념관' 본격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사업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기 및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 화해' 를 선언한데 이어 26일 총회엔 국민회의 권노갑 고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와 함께 발기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 행사가 주목되는 것은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될지 여부 때문. 대대적 개편을 추진 중인 국민회의는 박부총재 영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국민회의는 또 기념사업회 설립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확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입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민련도 "두 사람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인물을 발기인에 추천하겠다" 고 밝힌 뒤 간판급 인사를 물색 중이다. 최근 박부총재 영입을 놓고 국민회의와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한겨레신문』 1999. 8. 4 수

[국민기자석] "독재 잘해 박정희기념관?" 시골노인들도 냉소적 반응

한겨레신문 < 사설칼럼 >

시골에 가니 아버지를 비롯해 동네 노인분들이 한방에 계셨다. 내가 "아버지 이번에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는데요" 라고 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노인들은 "왜? 독재 잘했다고?" 하며 냉소를 보냈다. 모두 박정희 시대에 아침저녁으로 국토건설에 동원되면서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다. 박정희 향수에 가장 깊게 물들어 있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냉소적인데, 과연 현재 존재하는 박정희 향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주도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민주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준다. 기념관이란 글자 그대로 훌륭한 이의 공덕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다. 박정희 통치관이나 그냥 역대 대통령 통치관이라면 몰라도 아직 가치평가가 많이 내려져야 할 사람을 정부가 나서서 기념한다면 과연 누가 역사를 두려워 할 것인가? 이리다 전두환·노태우 기념관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김구 선생의 기념관도 아직 없는 이 땅에 독재자 기념관 얘기가 나오니, 과연 이 땅에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거나 한 것인지 매우 헛갈리는 요즘이다.

이상훈/대구 수성구 지산2동

민족문제연구소, 이달의 친일인물로 박정희 선정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물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정해서 화제다. 작성일: 1999-08-09 작성자: nuovo(뉴스센터)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물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정해서 화제다(관련기사 본지69호). 친일과 연구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이화여대 전 총장인 김활란을 이달의 친일인물로 선정한 이래 지난 8월, 8월의 친일인물에 박정희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 사실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내용을 담아 연구소 전용 인터넷홈페이지(www.banmin.or.kr)에 공개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정해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올린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보면 '오카모토 미노루 생도의 답사'라는 부분에는 그가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며, 일제 괴뢰국인 만주제국의 신경군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해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고 답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가 일본육사에 다닐 때에는 육사교관이었던 나구모 슈이치가 "다가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이외에도 ▷ 박정희의 독립운동? ▷ 배신과 생존 ▷ 장기독재의 길 등 박정희의 생애와 친일·독재 행위에 대한 글들이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인터넷에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 것과 관련해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해서 박정희에 관련한 일련의 분쟁이 사이버 세계에서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출처: 일일문화정책동향

◆ 특별기고

민족민주열사들을 욕보이지 말라!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에 감격하며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낸 수많은 민족 민주열사들의 가족들과 지난 시절 고난을 겪으며 끝없는 투쟁을 해 온 민족, 민주 운동세력들도 기대에 차 있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은 노동자, 농민, 학생, 민족 민주운동세력,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의 30년 투쟁으로 집권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30년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애증의 대상이었고 일정한 부분 만큼 김대중에 대해 사람들은 지지와 연민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전두환 집단살인 군부정권, 노태우, 김영삼 그 허위와 기만정권에 반대하여 그 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99년 여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를 용서하고 찬미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용서하든지 박정희 기념사업을 벌이든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0년 투쟁의 결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고 집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끝없는 투쟁의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했다. 김대중 대통령 혼자자 잘나서, 혼자서 온갖 고통을 겪고, 혼자서 민주투쟁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쳤고, 독재 정권들의 대를 이어 가며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이름 없는 수많은 민주 투사들의 고통과 끝 보이지 않는 투쟁,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유지 목적이 분명한 박정희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정부와 정권차원에서 하지 말기 바란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박정희를 기념하고 찬미하려면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 개인적으로 하라. 이미 김대중 정권의 본질과 속성은 국민들이 다 깨우치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과 기득권층만 살찌우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를 유지 확대하는 정권이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다 안다. 김대중 정권은 재벌 정권이고, 부패한 관리들의 정권이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정권인 것이다. 기만과 허위의 언론들이 지켜 주는 정권일 뿐이다. 그들을 기반으로 한 개혁이 무슨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난 30년간 시련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개혁하겠다고 김대중 정권에게 마지막 남은 피땀까지 바

쳐 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왔다.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은 100조 이상의 세금을 내고서도 재벌과 외국자본을 살찌우고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만들었다. 정작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려야 할 노동자들은 400만 이상이 일자리에 쫓겨났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 없는 것인가? 기득권만 살찌우는 구조조정용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월급쟁이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농민, 노동자, 학생, 서민들은 다 필요 없을 것인가? 항상 권력에 대항하고 투쟁만을 해온 민족 민주세력 따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수 십 년간 부패에 젖어 있는 전문 관료들과, 기회주의적 속성에 익숙한 정치인, 파리에 같은 언론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과거 모든 정권이 그것만으로 4천만 국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했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들의 도움만 있으면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온갖 쓰레기들을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끌어들이고 전두환이도 손잡고 노태우도 손잡고 김영삼이도 껴안아라. 국민들은 보수를 좋아하니 언론과 함께 국민들을 기만하고 끝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라. 다만 한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김대중 정권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 기반은 이미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자, 농민, 학생들 서민 대중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과 세계자본의 편이고 재벌과 가진 자들의 편이고 친일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쓰레기 언론의 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일제 때부터 군사독재정권, 사이비 문민정권까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던 놈들의 편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김대중 정권에게 부탁한다. 재발 민족민주열사들을 옥보이는 행위는 하지 말라.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과거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 달라. 박정희 기념사업 따위는 보통사람으로 돌아간 후에 역사책을 쓰든지, 기념제단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라. (1999.6.5)

공재호(본회 수석 부회장 한국감정원 전 노조위원장 서울대 입학73)

한국일보 1999/09/13(일)

[현대사 다시 쓴다] 유신체제

■ 박정희 장기집권 노린 '친위 쿠데타'

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 일대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모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회권한을 대행케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11월 21일 야당의 반대운동이 일체 금지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몽 활동 속에서 치루어진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신헌법이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민주 헌정의 종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87년 6월까지 독재체제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다.

■ 정치적 충격이 연속된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은 충격적인 정치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69년 9월의 변칙적인 3선 개헌안 국회통과가 그러한 충격과의 지발이었다면, 72년 10월의 이른바 「10월 유신」은 그 종착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 연초에 야당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이 들려오더니, 2월에는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를 표방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나왔다. 적대국가인 중공(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표방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한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집권 세력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안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9월에는 40대의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더니, 11월에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사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성장일변도 정책이 밑으로부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1개월 전인 71년 3월에 미국은 주한미군 6만명 중 1개 사단(약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5만여표차로 신승하는 데 그쳤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이 선거에서 두 후보는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등에서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김대중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을 위해 총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박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나서지 않겠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응했다.

■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순들

71년의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유신독재체제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71년 5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단없는 조국근대화」와 「혼란없는 안정」을 강조했으나, 「총통제 음모분쇄」를 내세운 야당에게 사실상 패배했다. 신민당은 이 선거에서 44.4%의 득표율로 이전의 의석 44석 보다 2배가 넘는 89석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돌파하려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7개월여만인 12월 6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위협」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72년에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유신체제로의 개헌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냈다. 8월에는 무원칙한 외자도입과 부실차관기업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사채시장을 동결하는 초헌법적인 「8·3조치」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미 72년 5월부터 「풍년 사업」이란 암호명아래 유신헌법 작성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71년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동아일보의 언론자유수호운동, 무려 80여명의 소장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촉발시킨 사법권 수호운동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 투쟁이 전개됐으나 독재체제를 향한 박 대통령의 행보를 멈출 수 없었다.

■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헌정중단과 초헌법적인 조치들을 통한 유신체제의 성립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적응,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실체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확실히 주한미군의 철수, 7·4 남북공동성명은 기존의 냉전적 안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태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즉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는 그후 곧바로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됐으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한국 포기나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유신체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위기는 관료적 권위주의론이 주장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운동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당시 산업구조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이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유신체제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 유신체제의 유산

유신체제의 성립,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상실한 박 정권이 점차 확산되던 반독재국민운동의 도전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연장하려는 집권 세력의 정권유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 운동은 그러한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기도를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강력한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 등의 통치기구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일관된 유신독재 체제는 수많은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후퇴시켰다. 특히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군인의 양산은 훗날 신군부 집권의 비극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신체제 기간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와 소득분배를 가로막는 재벌 특혜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남긴 유산들로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또 다른 충격적 회오리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정영국(鄭榮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박정희기념관 반대 역사학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 표명한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이 유신 선포일을 즈음한 이번 주를 박정희 주간으로 선포한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갖는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은 최근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박영재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16명을 공동대표로 한 모임을 발족시켰다. 이 모임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 주진오 교수는 21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정부가 10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중고교 역사교사를 포함한 전국의 역사학자가 모임을 결성했으며 2천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이미 이번 주를 박정희 주간으로 선포해 일선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과 기념관 건립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전국역사학자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역사학자들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에 대한 역사

학자의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는데 이어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조동걸 교수가 기초강연을 한 뒤 도진순 창원대 교수와 박찬승 목포대 교수가 각각 '박정희 시대의 서설'과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는 손호철(서강대), 임지현(한양대), 조원희(국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주진오 교수는 "우리도 대통령 기록관 건립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 개인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학계의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인물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기념관 건립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이런 활동과 함께 11월초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기념관 건립 국고지원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식기자 (taeshik@yonhapnews.co.kr)

[10월 11일자 문화일보 기사]

정부 지원으로 추진중인 '박정희기념관' 설립계획을 둘러싼 학계의 반발과 논쟁이 뜨겁다.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등 역사학계 원로들을 비롯한 1백여명의 학자들은 최근 '박정희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 모임(가칭)'을 결성, 이달 중순께 기념관 설립의 부당성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과 대규모 항의집회 및 시내행진을 갖는다. '전국역사학자 모임'측은 대학 재학생, 초중고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캠페인을 통해 반대 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8일 국민대에서 개막된 2회 비판사회학대회에서도 박정희기념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누가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희 기념관 설립은 과연 타당한가, 만약 설립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등을 놓고 참석자들간에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허상수, 정해구(성공회대)교수는 "기념관이란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를 기념하고 재평가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박정희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적은 있지만 독재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를 '기념'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진경(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씨는 "독일 홀로코스트기념관에서 보듯 '기념'이란 단어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박정희 기념관 설립에 대한 무작정 반대보다는 그것을 통해 한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진보적 학자들을 포함한 기념관 설립위원회 구성, 이승만 초대대통령부터 김영삼 전대통령까지 포괄하는 역대 대통령기념관으로의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정부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기념관은 순수하게 추모단체차원에서 소규모로 추진돼야 한다" "진정한 현대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등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왔다. 박정희기념관 건립계획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15대 대선 당시 공약대로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기념관 건립 예산 7백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약속, 1차분으로 내년 예산에서 1백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동걸교수는 '역사비평' 가을호 권두시평에서 "지금 정부가 기념해야 할 것은 피를 흘리며 달성한 민주주의"라고 질타(본보 8월25일, 일부지방 26일자 기사 참조)해 반향을 일으켰다.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오는 18~23일 전국 대학, 중·고등학교 역사시간에는 '박정희'가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반대해 지난 9월 중순 결성된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모임'(공동대표 강만길·조동걸 등 16인)이 13일 "이 기간을 '박정희 주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 역사시간에 박정희 문제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임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오 교수(상명대·국사학·02-2287-5179)는 "정치권이 '화해'를 내세우며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청소년 등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에 따라 박정희 주간의 대학, 중·고등학교 역사시간에 기념관 추진 세력의 주장뿐 아니라, '일본 사관학교 졸업, 일본군으로 중국전선 참가' 등 기념해서는 안될 박정희의 모습도 학생들에게 소개한 뒤 학생들의 종합적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역사학자모임은 이 기간에 '역사학자 2천명 서명'을 목표로 기념관 반대 서명 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임은 이런 성과를 모아 25일 성명 발표회 겸 토론회(장소 미정)를 연다는 방침이다. '박정희 기념관 국고 지원에 대한 전국 역사학자의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도진순 교수(창원대)·조동걸 명예교수(국민대) 등이 '기념관 건립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 교수는 "박정희 주간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공청회를 거치거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자료관 건립 준비모임'(민주자료모임·대표 조희연·02-2610-4152)도 이에 따라 '박정희 주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자료를 중점적으로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근 기자)

【자료】 2

『중앙일보』 1999. 04. 22.

『권영빈칼럼』 대통령 자료관을 짓자

우리에게 네 분의 전직대통령이 있다. 4년 뒤면 전직대통령 다섯 분을 모시는 흔치 않은 기록을 지니게 된다. 다행히 네 분 모두 건강이 좋은 것 같다. 경제적 여유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네 분 모두 할 일이 없어 보인다. 아니 그중 몇 분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돈과 정력을 쏟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인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끔 간곡한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다. 대통령기념도서관을 짓고 재직 때의 공적, 사적 기록물들을 챙기고 전시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벌이기를 제안한다. 별로 본받을 일도 못했는데 무슨 기념관이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잘했던 못했던 재임 시 내린 국가 중요 정책결정은 그 자체가 역사적 가치나 의미를 지닌다. 외국지도자들과의 서신이나 개인의 일기라도 좋다. 일체의 기록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분류하고 때가 되면 공개하는 미국 식 대통령기념도서관을 설립하자는 취지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우선 한국의 정치풍토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건강, 돈, 시간이 충분하면 왕년의 고수 정치인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여기에 다수 추종자들이 모여든다. 등산하고 골프장을 찾는 것도 좋다. 그러나 퇴임대통령의 소일거리가 이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고향을 찾고 성묘정치를 한다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민들 눈엔, 전직이 현직을 독재자로 몰고 전임이 대북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후임이 일을 그르쳤다는 식의 물고 물리는 꼴불견 대결로만 비칠 뿐이다.

전임과 후임이 원수간이고 전직이 현직을 손가락질하는 정치풍토에서 정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국민교육에도 악영향을 준다. 부시 전대통령의 기념관 준공식에서 전임대통령들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사진 한장이 얼마나 흐뭇하던가. 퇴임대통령이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우리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기록의 보고다. 잘한 일 못한 일, 이 모두가 우리 현대사의 족적이고, 이를 거울삼아 미래를 여는 경험과 교훈의 산 자료들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정책이든 성공한 업적이든 가리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있게 재임 중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다시 회고하며 쓰는 역사적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후세에 남을 업적이 없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치적 중 가장 잘한 일중 하나가 34년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s) 설립이다. 서울 동대문운동장의 16배나 되는 지하서고엔 연방정부의 모든 문서가 종합, 분류된다. 12개 지역문서관과 11개 대통령도서관을 국립문서관이 관할한다. 한국 현대사 관련 문서가 이곳에 어림잡아 2백만쪽 이상이 소장돼 있다. 지금 우리 실정은 어떤가.

유일한 대통령 사설기념관이 이화장(梨花莊)이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우남(霧南) 이승만(李承晩)의 기록들을 보관해오다가 두해 전 연세대 한국학연구소에 기증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박정희(朴正熙) 기념관을 추진 중이지만 진척이 별로 없다. 이후의 대통령들은 통치사료비서관까지 두고 재임중 기록물을 정리, 보관한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고 역사의 일부다.

전직 네분이 모여 이 역사기록물들을 어떻게 수집, 정리할지 함께 의논하고 추진한다면 기업과 독지

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서둘러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역사기록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다. 광복 50주년이 지났고 20세기가 저물고 있지만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 자료는 단 한번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지 못했다. 일제 식민자료는 일본에, 전쟁자료는 미국, 중국, 옛소련에 더 많이 보관돼 있다. 일본 국회도서관은 미국내 일본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14년간 2천억원을 들였다. 이런 작업을 벌일 기관이 정부기록보존소·국사편찬위원회·정신문화연구원·국회도서관이다. 최근 국가기록연구재단이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그렇지만 하나 같이 재원이 부족하다. 기천만원 예산으로 이 큰 작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방법은 한가지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이 연대해 흩어진 국가 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선다. 영원한 현직은 없다. 제2건국운동이 역사 바로세우기라면 흩어진 국가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서 첫 출발을 해야 한다.

<권영빈 논설위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경향신문 [사설칼럼] 1999. 5. 10. 月

[사설] '박정희기념관' 지원한다는데

고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박전대통령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경제개발의 주역으로, 한편에서는 비민주적 권력자로 평가가 엇갈린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박전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는 인사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는 제3자가 알가알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사회에서는 각자의 의견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권리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가 진행중인 특정인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원 등을 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 더구나 현재 추진중인 박전대통령 기념관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일방적인 업적 위주의 홍보가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지원 근거가 희박한 사업에 박전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정부가 자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작고한 이승만·윤보선 전대통령과의 균형도 그렇고 지금도 활동중인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대통령의 기념관 설립 요구가 제기된다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 활발한 미국에서조차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0여년이 걸렸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30년대 최악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게다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뛰어넘은 인간승리로 미 국민에게는 영웅시되는 전직 대통령이다. 사망 직후 그의 기념관 설립 제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9년이 지난 후에야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재임중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이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고 그 기록들을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한다. 미국이 기념관 설립에는 인색하지만 기념도서관 설립에는 대통령도서관법 등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관련자료를 비롯한 정부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령

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사회단체에 맡기기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대통령 관련자료 보존을 위한 기념도서관 설립부터 서둘러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칼럼] 1999. 5. 14. 金

[사설] 과거와의 화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대구에서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근대화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政敵)로 슬한 탄압을 받았던 김대통령의 이런 긍정적 평가와 기념관 건립지원 약속은,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통한 적(敵)과의 화해며 국가적으로는 역사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 대단합 차원의 정치적 화해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동서갈등의 심화는 박정희시대의 정치적 결과물이다. 두 지도자간 입장 차이가 동서갈등의 골을 깊고 넓게 했다고 본다면, 비록 생사를 달리한 지금이라도 두 지도자간 화해는 동서간의 벽을 낮추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입으로만 외치는 국민 대단합이 아니라 갈등의 원초를 촉발했던 당사자간 화해가 동서화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통령의 '과거와의 화해'가 단순히 총선과 경북지역 여론 무마를 위한 일시적 정치발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와 정책에서 그런 화해와 대단합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 현대정치사는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 구도속에서 새 정권이 태어나면 구정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김대통령의 과거와의 화해는 향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제대로 된 정치사로 자리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박정희기념관 못지 않게 초대대통령 이승만(李承晩) 기념관 건립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싶다. 정치지도자의 공과(功過)란 언제나 병행한다. 말기 독재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독립과 국가건설을 위한 헌신은 초대대통령으로서 기념해야 마땅하다. 건국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 기념 자료관 또는 도서관 건립 자체가 역사의 정통성을 회복하면서 국가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훈장을 세우는 역사작업이다.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인 내셔널 아카이브 산하에 대통령 기념자료관이 있다. 현금과 정부예산으로 건립·운영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료는 국가가 보관해야 할 귀중한 자료다. 훼손할 수도, 왜곡해도 안 되는 사료다. 이 역사적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고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국가지도자들이 전횡을 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이 단순한 추모차원의 기념관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보관, 정리하는 '역사 법정(法廷)'으로 기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조선일보』 05/19(수)

[시론] '박정희기념관' 의미있다.....함성득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원 약속과 그가 이룩한 근대화의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지역감정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합의 정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과거 정치사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러한 역사적 화해를 김 대통령의 '정치적 책략'으로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즉 진정한 지역감정의 해소라기보다는 내년 국회 의원 선거를 대비한 김 대통령의 'TK 민심 끌어안기'라는 정치적 실리 추구 전략이라는 것이다. 둘째, 역대 대통령 중 유독 박 전 대통령의 기념관만을 현시점에서 건립해야 하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와 경제적 성장의 주역이란 점은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그가 노정시킨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박 전 대통령기념관 설립은 그에 대한 개인적 숭배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영남지역의 지역감정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넷째, 현재 우리의 경제적 난국을 고려할 때 부족한 정부의 재원을 굳이 박 전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투자해야만 하는가라는 적실성 문제이다.

그러나 우선 정략성의 문제는 박 전 대통령기념관 건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첫째 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가 정략적이라 해도 지역감정 해소의 노력으로써 그것이 갖는 시대 정신과 보편성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이나 윌슨 대통령에 의한 '여성참정권 인정' 모두 남부의 반대세력 약화와 여성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대적 흐름 안에서 더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하여서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라는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를 계기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통치사료 보존을 위한 도서관 및 기념관 건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박 전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된다 해도 이것이 박 전 대통령 일가와 특정 지역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정치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숭배나 지역감정의 상징물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공과를 배움으로써, 우리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적 기관으로 확립시켜야 한다. 실례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의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임기 중 통치사료의 보존 노력과 함께 건립 부지로 자신의 개인용 토지를 정부에 기증하여 국가적 유산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역시 재원 마련을 민간주도로 하고 과거 통치사료의 보존과 정치적 경험들은 제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적실성 문제 역시 기념관의 형태 및 역할의 고려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기념관은 통치사료의 체계적 정리 및 보존을 위한 도서관 시설과 함께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이 갖는 제도적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통치사료의 정리 및 보존을 위한 도서관 중심의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갖는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특정정권의 정략적 차원을 떠나서 과거와 현재의 혼돈을 일단락지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수·대통령학)

경향신문 [사설칼럼] 1999. 5. 26. 水

[정동칼럼] 기독교 자기개혁부터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한다. 뭐라고 해도 고마운 일이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경제적 궁핍이 어떻게 인간의 품위를 파괴하는가는 최근 식량위기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참상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이다. 과다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결핍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인간적 욕구마저 봉쇄함으로써 한 사회를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동물적 생존경쟁에 준(準)하는 상태로 이끌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경제가 총붕괴의 추락을 면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의 시위를 우려한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탓만 하는 것은 안이한 노릇이다. 나는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한국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사회만 보더라도 나태와 맞물린 낭비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구조조정이 개혁의 미명(美名)아래 모든 것을 광포한 시장의 논리에 맡겨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점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런데 기독교의 일정한 포기를 전제로 추진될 수 있는 개혁이 한 사회의 합의적 규칙으로 정착하려면 공평성이 기준으로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선수범(率先垂範)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독교의 자기개혁이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게만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개혁에 동참하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그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개혁 이전으로 회귀하고 재벌 개혁도 그저 그렇고, 제일 문제가 심각한 정계 역시 그냥 그 꼴,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개혁의 총체적 청사진을 국민적 합의 속에 마련하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개혁의 중심세력과 함께 개혁을 추진할 때 지역적 분열과 계층적 분립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통합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핵심적 작업이 우유부단 속에 실종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낯도깨비들이 도처에 출몰하고 있다. 정부의 묵인 아래,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생령(生靈)들이 백주대로를 활보하더니 급기야는 신군부의 원조(元祖) 박정희(朴正熙)망령까지 횡행한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국민의 정부 시대인지 적이 의심하게까지 만든다. 나도 물론 지난 군사독재, 특히 박정희씨에 대한 평가가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박정희기념관이나 지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오히려 유신체제의 유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전면적 개혁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인 것이다. 지금은 군사독재의 망령들과 제휴할 화해의 시대가 아니다. 지나간 시대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맡기고 「국민의 정부」 본연의 작업, 즉 우리 시대의 역사가 요구하는 개혁작업에 매진할 때다. IMF사태로 파산한 지난 시대의 사회 작동원리를 대신할 새로운 모델을 광범한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 21세기의 비전 속에 실천함으로써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인 국민통합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두 세기의 갈림길에서 세계가 격동하고 있다. 한반도를 향한 파고(波高)는 흉흉하다. 외세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적대적 분단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바탕인 한국 내부의 총체적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독교의 개혁이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원식 <인하대 교수·문학평론가>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 7. 18. 日

[강만길] 역사칼럼-프랑스 대숙청과 친일파 청산

오랫동안 프랑스 주재 특파원을 지낸 주일섭씨의 저서 <프랑스의 대숙청>을 읽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와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지배는 같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민족사회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였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조선 지배와 독일의 프랑스 지배가 같았다. 조선의 피지배기간이 근 40년이고 프랑스의 그것이 5년에 불과한 점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경우 국내 게릴라부대들이 있어서 미·영 연합군의 파리 입성 전에 게릴라들이 먼저 파리를 해방시킨 점과, 드골의 '민족해방프랑스협회'(CFLN)가 국내의 반 나치 게릴라부대들과 협력하여 미국 등 연합군이 점령지구에 군정을 실시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취한 점등이 크게 달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했고 국내 저항세력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독립동맹 등 해외 좌익조직은 건국동맹 같은 국내 저항조직과 일부 연결되었으나 일본군 항복 전에 국내로 진격해 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미·소 양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군정을 폐기 되었으며 이 점이 프랑스의 해방과 크게 다른 점이였다. 같은 파쇼세력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조선과 프랑스의 해방 과정이 이 같이 달랐기 때문에 반민족세력에 대한 숙청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게 불과 5년간 점령당했던 프랑스에서, 사형선고 된 6천7백여명 중 7백60여명이 집행되었고, 2천7백여명이 종신감제노동형, 1만6백여명이 유기감제노동형, 2천여명이 금고형, 2만2천여명이 유기징역형을 받았으며, 3천5백여명의 공민권이 박탈되었다고 <프랑스의 대숙청>은 1951년 프랑스 정부의 의회보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북한의 반민족세력 즉 친일파에 대한 숙청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통계와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업적을 구할 수 없지만,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의 반역사적 때문에 한 사람의 친일파도 제대로 숙청되지 않았다. 4·19는 그런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렸으나 그 주체세력이 정권을 쥐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색이 짙은 장면정권이 서게 되었으며, 그것을 뒤엎고 성립된 것도 구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정권이었으니 친일파 숙청이 단행될 리 없었다. 이제 해방된지 반세기가 지나 친일파는 극히 일부가 잔명을 보전하고 있을 뿐 대부분 죽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의 화해를 더 심화시키면서 대중문화를 개방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지금 일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일파인명사전'을 만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1만 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이 이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 '친일파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지금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또 때늦게 친일파 운운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친일파를 숙청하는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해도 그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청산은 한번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점에서는 지금도 전혀 때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숙청'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청산'만은 앞으로 우리 역사의 바른 발전을 위해,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면서 새 역사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친일파인명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주로 그들의 이름과 반민족 행적을 소상히 밝히는 일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반민족행위인가, 그들은 왜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들의 '친일 논리'는 또 무엇이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해방 후 왜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득세했는가, 그들의 반민족 행위가 일제시대와 해방후의 시대를 통해 우리 민족사회에 끼친 영

향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우리 역사 진전에 끼칠 해독은 무엇인가 등을 이론적으로 냉철하고도 소상하게 밝혀 다시는 그들과 같은 반역사적·반민족적 행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 8. 5. 木

[편집자에게] 아버지 앓아간 독재정권 미화라니

'독재자에게 후한 한국인'(일치 9면)이란 칼럼을 읽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독재정권의 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분이 결국 지역패권주의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나의 아버지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74년 3월 어느 날 잡혀가신 아버지는 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24시간도 안 돼 다음날 새벽 나의 아버지를 포함한 여덟 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독재정권에 잡혀간 뒤로 단 한번의 서신도, 단 한번의 가족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시신마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독재자 박정희가 저지른 추악한 인권유린과 범죄는 감춰진 채 미화하고 다듬어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념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박노자 교수의 지적은, 기념관 건립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과 정당과 정치인에게 한번 더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송명희/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 8. 17. 火

[이원섭칼럼] '친일' 역사법정에 세운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다.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다면 친일파 청산 운동은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비뚤어진 정신과 의식구조를 혁파하는 데 뜻이 있다. 분단을 초래하고 그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며 분단을 영속화한 밑바탕에 친일파들의 독세와 발호가 있었다. 국민 정신을 황폐케 한 책임도 크다. 일제에 빌붙어 민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 단죄되기는 커녕, 독립한 새 나라에서도 여전히 권세를 누리는 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속이 뒤집히지 않았을까. 민족정기가 바로 설 수도, 사회정의와 기강이 논의될 수도 없었다. 기회주의, 출세주의, 결과지상주의 등 빛나간 가치관이 횡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친일파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해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자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사업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다. 원로 교수들의 발의로 교수 사회의 서명이 시작된지 두달 반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친일파 청산운동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는 양심세력의 역량을 모아 범민족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친일파 3천명 가량의 범죄 행각과 당시 사회상을 2002년까지 30권의 책으로 편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해마다 8월이면 반짝했다

가 스러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저력이 엿보인다. 대학교수들에 이어 종교계와 문화계 경제계 등으로 지지 서명운동은 계속 번져갈 기세다. 해방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어야 할 일이 반세기가 지난 20세기의 끝 해에 새삼 주목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록 당시에 감옥에 보내지는 못했으나 역사에라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시민운동의 진전이고 성숙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것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지만, 조국을 위해 자신과 가정을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만주별관을 떠돌며 일체에 항쟁했던 그 많은 선각자 가운데 후세에 이름이나마 남기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친일파들이 반공 애국투사로 재빨리 둔갑해 독립투사들을 폄박하는 일까지 벌여졌다는 것이다. 일체의 밀정이나 고등계 형사로 악명을 떨치던 자들이 경찰 간부가 되어서 빨갱이를 잡는다며 독립투사들을 박해하고, 권력자들은 이를 비호했다. 일체를 칭송하는 글이나 그림을 남기고, 학도병 지원을 독려한 자들이 독립한 나라의 원로요 지도층으로 군림했다. 오늘날 특히 문화·예술계에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각종 상들이 만들어져 버젓이 연륜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프랑스는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을 극형으로 다스려 민족 자존심을 되살렸다. 벨기에 네델란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해방 뒤 친일파들을 철저히 소탕했다. 그러나 남한의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건국사업이 바쁘니 과거를 묻지 말자며 이들을 중용했다.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즘 자주 듣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다. 우리가 이제 와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던 것을 탓하지만, 기준을 엄격히 해서 본다면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의 현실적 필요와 정치적 이유에 밀려 역사의 평가는 늘 뒷전이다. 친일의 정신적 사생아인 군사독재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거창하게 추진되고, 그 후계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당히 사면을 받아 여전히 위세를 부린다. 문민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역대 군사정권에서 출세했던 이력이 화려하고 노련한 정치경력으로 포장되고,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미화되는 꼴을 지켜보기란 역겹다. 명예도 이름도 없이 자신을 던지며 민주화에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에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는 또다른 역사의 후퇴다.

<논설실장>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 9. 2. 木

[야 한국사회] /그래 박정희를 기념해보자/이진경/서울대 강사

어떤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은 기억에 관한 영화다. 거기서 왕가위는 형수가 되어버린 과거의 연인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한 검객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감독보다 배우가 유명해 <시고니 위버의 '진실'>이라고 번역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죽음과 소녀> 역시 기억에 관한 영화다. 고문의 기억,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폴리나는 밤에 다가오는 자동차나 문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목숨을 건 긴장 속에 들어간다. 사실 어떤 과거의 일, 그 기억을 벗어 던지지 못해 매여 있는 존재, 그것은 유식한 말로 '중음신'이요, 여름이면 자주 보게되는 '전설의 고향' 귀신들이 아니던가? 귀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언가? 알다시피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사를 지우기 위해서다. 그것이 지워지면 그들은 아무런 주저 없이 떠난다. 따

라서 대부분의 귀신드라마는 기억을 지우는 것으로, '해원'으로 끝이 난다.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지우지 못하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억만큼이나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한 건 이런 이유다.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선사들의 방법이다.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집착을 끊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적어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나 기억에 매여 공포와 긴장 속에 혹은 환상 속에 사는 범부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치유'다. 잊을 수 없던 과거를 불러내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다. 귀신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신분석가가 사용하는 방법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의식에선 지워졌으나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를 찾아내 드러내는 게 바로 그들의 치료 방법이다. 이 점에서 정신분석과 무당의 굿은 하나의 경계 안에 있다. 자신을 고문한 의사를 죽음으로 협박해서라도 '진실'을 찾으려는 폴리나의 '정신병적' 행동도 그렇다. 진실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원한을 풀려는 것, 그것은 무당의 방법이자 정신분석가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기념'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기억이라는 개념과 나란히 간다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점은 기억이 무의식적인 것임에 반해 기념은 의식적인 것이라는 거다. 즉 과거의 어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는 것을 기념이라 한다. 그것은 생일이나 광복절처럼 좋은 것도, 전쟁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나쁜, 아니 아픈 것도 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기념의 방식이 있다. 가령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를 죽여 강에 던져버린 곳에도 그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최근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해 감히 지지한다. 그래, 그것은 만들어져야 한다. 뒤에 전두환 기념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도 찬성의 한표를 던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가! 그 아픈 영혼을 달래고 쓰린 기억을 아르게 끄집어 풀어주는 그런 노력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는 '인혁당' 관련자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성장 조국'을 위해 뼈빠지게 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 사람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나 개발주의로 인해 죽어버린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들, 공동체적 관계들도 들어가야 하고, '반공' 국시가 만들어낸 극한적 적대관계도 들어가야 한다. 또 그런 종류의 독재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 기념해야 하니 10·26 기념실도 반드시 따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박정희라는 이름과 결부된 아픈 기억의 상처들이 자유로이 허허로운 하늘 저편으로 훨훨 날아가버릴 수 있기를...

[교수신문], 1999.10.4. '신문로세평'

이승만, 전두환 기념관은 또 누가.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방침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의 만찬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건립추진위원 40여명에게 국고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국회의 동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여론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고를 들여 지원하고, 대통령이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대통령 자신이 고 박대통령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법 제5조에 기념사업을 정부가 돕도록 되어있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관련 보도가 나가기 무섭게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치적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지 않으며, 더구나 박정희의 처세, 변절의 궤적이 대통령으로서 존경할 만한 것이 못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경제 형성의 장본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역사의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찬성론에서 있는 경우 그 주된 논리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거나, 그나마 이정도 살게 된 것이 경제개발 덕분 아닌가 하는 이유가 주를 이룬다. 처음 일부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들어 찬성론을 펴기도 하였지만 억지논리 가운데도 기념관으로서가 아니라 공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법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자료관이 적절한 것임을 제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 역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래 놓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예의 그 무관심, 언제부터인가 만연된 국민일반의 기억상실증을 언론과 정부, 국회가 이번에도 한껏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숱한 희생을 치르고 겨우 찾게된 우리 현대사의 진실이 또다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권이든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존중하고 진작시키는가, 더 중요하게는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 위에서 앞으로의 사회발전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귀착된다. 역사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중세 역사상 전 왕대에 대한 체계적 평가로는 고려 6대 임금 성종에게 제시한 최승로의 오조정적평(五朝政績評)이 처음이다. 이는 성종 이전 다섯 왕의 정치를 유교정치사상의 기준에서 비판한 것으로서, 창업주 태조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여 전왕대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몇몇 평가 역시 역사적 안목에서 현 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륜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 폭과 깊이는 과연 어떠한 수준에 있는 것일까.

지난 80년대 말, 87년 민주화운동의 유산(流産)이란 기막힌 현실에 고뇌하면서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읊은 적이 있다.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가 세웠고/ 황토현 녹두장군 기념관은 전두환이 세웠으니/ 광주항쟁 시민군 위령탑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아아 기막힌 대조법이며/모진 갈증이며" 대한민국의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이룬 마당에 더 이상 이와 같은 기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겠으나 차운(借韻)하여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갈증을 느낀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놓은 국회가/ 4월 혁명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기념한다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데 거수기가 된다고 하는구나/.../ 쿠데타로 정권잡은 박정희 기념관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다고 하니/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꺼이 존경하고 기념하고 싶은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어설픈 기념관을 건립하여 겪게될 곤란은 누가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은 기념관이 급한 때가 아니다. 국회를 기다릴 것이 대통령 결정이 내려야 한다.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공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잘 운용하는 일이다. 관련 법규를 보다 확충하여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 기념관을 가질 자격이 생길 것이다.

김인걸(서울대, 국사학)